

第284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1 號

國會事務處

2009年11月11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附議된案件

- 의사진행의 건 ..... 1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 3
-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 ..... 9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9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 9

(10시16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사진행의 건

○의장 김형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운환 의원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상주시 출신 한나라당 성운환 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일부 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법하고 부당한 안건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신 대법관 사건은 진보 성향의 일부 법관들이 우경화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뒤집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음모하고 유도한 사건입니다. 금년 초 일부 법관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

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은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엄중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광우병 촛불시위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집중 배당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담당 법관에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하라고 요구하는 등 재판 간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서 대법원은 신 대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 경고 조치하고 종결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을 지금 와서 다시 꺼내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의 권위를 훼손하고 사법부를 뒤흔들려는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기도이고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려는 저급한 책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야당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결의안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하고 위법한 안건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법관 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의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특정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 법관이 법관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서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 대법관을 탄핵하려면 신 대법관이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제시한 탄핵사유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재직하면서 일어난 일만을 거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된 이후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당이 제시하는 탄핵사유는 어떤 경우에도 신 대법관을 탄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인사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 해석상 그 특정인이 파면 또는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 해석의 법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에 행한 위법행위라는 것은 대법원 징계절차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경고조치에 그쳤을 정도로 아주 경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 대법관이 설사 법원장 재직 시절에 행한 행위로도 탄핵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고처분을 받을 정도의 가벼운 위법행위만으로는 신 대법관을 탄핵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결국 일부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하고도 무효인 안건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18대 국회는 2년 내내 미디어 법안,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현안을 둘러싸고서 여야가 극한대립을 벌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집단폭력이 난무하고 무시무시한 전기톱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야당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서 되지도 않는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면서 사법부를 혼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탄핵소추 안건을 들고 나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야당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국민을 불모로 잡고 벌이는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두고 차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민생을 보살피고 예산 심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력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성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 출신의 민주당 우윤근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3명을 포함한 106명의 이름으로 대법관 신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해서 재판의 독립을,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진상조사 결과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에 관여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만일에 이것이 외부 기관에서 조사했다면 아마 결론은 자명하게 났을 겁니다. 재판에 관여해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해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한나라당은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자동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성윤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긴 법률 이론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어서 헌법 제65조에 ‘재직 중’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탄핵제도의 존재 이유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배제하자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여부는 국회법 제130조에 탄핵소추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 여부를 정당하게 표결로 심판하는 것이 법의 취

지고 올바른 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은 우선 법 절차 규정을 어기고 있다, 이것은 또한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국회법의 절차를 존중한다면 오늘 중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7월 22일 날 통과된 언론악법,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습니다. 이 절차를 바로잡고 원상회복하십시오. 이것이 국회 선진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의장님께도 요구합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여부를 알기알부할 수 있습니다. 마는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절차를 준수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상정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국회 선진화로 가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치공세 아닙니다. 우리가 자제했던 것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영철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명예스럽게 사퇴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를 상대로 야당이 정치공세를 펼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여야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106명의 이름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내일 10시까지 법 절차대로 상정시켜 주십시오. 그것만이 법 절차를 준수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0시27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를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하루 종일 때로는 퀴즈 같은 질문까지 받으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세종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부터 이 세종시 특별법에 관해서 반대 표결을 했던 사람이고 그 생각에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수도가 분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생각했고,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가져와서 이것은 자칫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어저께 민주당 이용섭 의원께서 세종시 관련 질의한 것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보완된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또 충청인이 원안대로 그대로 하자고 한다면 원안 그대로 하겠다. 이것이 현재 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말씀의 취지는 폭넓게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로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저의 결연한 각오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어떤 분은 해석에 따라서는 ‘원안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의 결연한 각오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준비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부 산하 여러 공공기관들, 전부 다를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수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약에 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단체협약 조사한 결과 납득할 수 없는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고 있는 것은, 노조의 가입에 관해서 만약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면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제가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무려 35개 노조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노조는 안 되겠다, 노조가 싫다' 해서 탈퇴하는 경우에 그런 탈퇴를 하게 되면 즉시 반드시 사용자가 해고를 해야 되는 곳이 3개나 되고, 조합이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퇴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9개 노조가 됩니다.

총리께서는 사기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모르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 혹시 상속 말이지요, 재산을 상속받고 그런 것은 하는데 직장을 상속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못 들어봤습니다.

○**김기현 의원**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지요.

직장을 상속받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상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거나 순직을 하는 경우에 충분한 예우를 한다 그래서 필요한 퇴직금도 가산해 드리고 위로금도 추가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이고 또 단협에 그런 사항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 플러스 알파로, 요즘 플러스 알파가 유행인데 플러스 알파로 거기다가 순직자 유족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공상으로 퇴직하는…… 직원을 채용합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 아들이나 배우자가 직

장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주인이 인도적 차원에서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으로 인한 게 아니고 일반 사망 그러니까 다른 개인적인 일로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나 혹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그 유족이 직장을 상속받는 이런 단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처음 듣습니다.

○**김기현 의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 파워포인트는 계속 보여주시고, 제가 시간관계상 바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노조에서 말이지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 정리해고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압니다.

○**김기현 의원**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피수단을 다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감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이 정리해고를 할 때 60일 이전에 반드시 조합하고 합의를, 협의도 아니고 합의를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단협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회사가 아주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리해고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없잖아요, 다 합의해서 하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단협이 있고…… 지금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과도한 내용의 단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드렸습니

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괜히 시끄럽게 해 봐야 나한테 도움 될 게 없다, 좋은 게 좋지. 그냥 내 임기 동안 적당히 있다가 조용하게 끝나면 나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텐데'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노조는 노조대로 하여간 기관장한테 많이 얻어 가지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국민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요.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조의 지원을 얻고 정권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눈치도 분명히 봤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마저도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리,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공감합니다.

○김기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도가 별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을 보니까 '노조가 합의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계속 이렇게 놔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실상을 조사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조사를 해 보시고요. 이 기본적인 사항들, 정 이것이 만약에…… 세상에 직장을 상속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도한 단협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이것이 정 시정이 안 된다면 법률상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리고 당장 우선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최종 합의를 하기 전에 감독관청에 그 단협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까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과도한 복지혜택의 칸막이가 주인인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 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기강해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수원 관

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이것은 내용이 나쁘다기보다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잘 안 내고 몇 기관만 내왔는데, 제출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지금 저한테 연수원 제출한 곳이 총 37개 기관 정도 됩니다. 그 37개 연수원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을 보니까 통계청 연수원이 약 61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약 520억 원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7개 만드는 데 460억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총 합쳐 보니까 37개 기관에 3490억 원, 약 3500억 원의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 만드는 데 보니까 평균 대략해서 103억 원 정도, 운영비를 보니까 1년 평균해서 약 27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동영상은 한국과학기술원 강릉연수원의 모습하고 그중에서 몇 군데를 골라내 왔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벽걸이TV도 있고 자재도 굉장히 고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속초연수원의 모습입니다. 실외수영장까지 갖추어져 있고 게임기 있는 오락실도 비치되어 있고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스공사의 정선연수원의 경우에도 보면 노래방까지 내부에 시설이 갖추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수원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이용되는지를 봤더니,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 이용률이 약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곳 중에서 특히 심한 곳을 보면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약 15%, 지방행정연수원은 약 34%, 그리고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은 약 34%, 이런 형태로 굉장히 낮은 평균적으로 약 50% 조금 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고요, 어떤 연수원의 경우에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통계 자료를 달랬더니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수원 만들 때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손해가

얼마 났는지, 사실 기관장 입장에서나 그 조직 입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어떤 회사의 임직원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연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과도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도 저의 평소 생각인데, 이미 만들어진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만들 때는 좀 더 조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제 생각은 연수원을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칸막이 쳐서 소유하고 있으니 이용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연수원을 보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운동장 있고 숙박시설 있고 그리고 토론회장 있고 강당 있고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어디 기관 따라서 특별히 다른 그런 하드웨어를 갖춰야 될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용도가 없는 연수원들은 합쳐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전체의 교통정리를 통할해서 하면, 이런 통합시스템을 만들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리고 우선 당장에 민간이라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에 개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봐야 내 호주머니 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소유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차체에 정부산하기관 전체의 연수원을 전부 한번 살펴보고요. 과도하게, 더 이상 팽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참여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친 종합적인 수해방지계획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한강종합개발이나 울산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태화강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초유의 사업이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 아니냐 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대로 저희가 한강종합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한 것이 바로 하도를 준설하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보를 2개 설치한 그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물이 3급수에서 2급수로 좋아지고 수량이 상당히 풍부해지고 아주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살고 친수공간이 확보된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태화강에서도 거의 비슷한, 물론 태화강에는 보는 없습니다마는 하도 준설이라든가 원유 제거라든가 완전히 오염원 차단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물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바로 이 사업을 4대강에 확대해 나가자, 다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친환경적인 고려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 4대강 사업에서는 좀더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좋은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 정권이나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공감합니다.

○**김기현 의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국민의 칭찬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책임과 자신이 있으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정말 최소화시키면서 좋은 그런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 상태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암각화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암각화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암각화에 새겨진 것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300개 정도 되는 선사시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면, 이렇게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국보 285호 암각화가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년 4~5개월씩 물에 잠겨서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면서 아주 급속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TV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런데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전 국무총리도 여기에 다녀가셔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셨고,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도 다녀가셔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도 다녀가셨고, 문화재청 차장도 다녀가셨는데,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핑퐁하면서 다른 부서로 계속 미루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댐의 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유로(流路)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식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식수가 모자라는 판에 식수인 댐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낮출 수가 없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기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낮추려고 그러면 다른 대체 수원을 확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만 나오면 다 '그것은 모르겠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저도 이 문제에 대

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제가 금방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토부나 울산시 등 관계기관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진지하게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진지하게 검토해 왔는데 지금 대답이 없이 40년째 저러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선 당장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다른 대체 수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까지? 우선이라도 이것의 추가 훼손을 막는 임시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대체로 답변이 다 신통치 않다고 하시던데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김기현 의원** 알겠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물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 사연댐이라는, 수위를 낮추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심각한데, 기존에 있는 것도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되는 물 문제, 식수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 심각한 물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반응이 전혀 없다고 그러합니다.

장관님, 이것 왜 그렇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지금 반구대 암각화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볼 때에는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러면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 울산의 물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물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기존의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운문댐이나 이런 여유 있는 용량을 어떻게 울산지역에 활용하게 할 것이냐, 또 소규모의 댐들을 어떻게 울산지역에 만들어서 울산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울산시의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답변은 참 잘 하시는데요, 그것이 그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놓은 대책들이 보면 소규모 댐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 있고 또 용도 전환은 KDI에서 조사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지금 방법 중에서 가장 그래도 확실한 것은 대체 수원을 얻는 것인데, 운문댐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기현 의원** 그런 댐의 물을 가지고 오든지 해서 이 식수원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나라의 국보도 보호하고……

아니, 사람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저도 그 운문댐 여유 용량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관계되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예,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기현 의원**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석유 정제나 석유화학 클러스터도 있고요. 그래서 동북아 물류 허브의 최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석유 사업들은 그냥 석유 정제해서, 원유를 정제해서 파는, 석유 제품만 판매하는 것을 주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또는 제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류 쪽도 우리가 손을 대면 분명히 이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이것이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보니까 비용편익비율이 1.17로서 상당히 좋게 나왔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김기현 의원** AHP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김기현 의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다 평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재정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김기현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많은 강조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허브 이 사업은 지난 정부가 석유 공급 위기 시에 대비해서 정부 돈으로 석유비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서 오일허브를 구성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석유 비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유치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사업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정부가 사업자로서 일정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사업 촉진자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방과제를 건설한다거나 부지를 매립한다거나 이런 기반시설마저도 민간에게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대체로 민간의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그냥 재정 사업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분 참여 형태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에 어떤 사업 촉진자 역할을 해서 사실상 민간 자금과 정부 자금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가 초기에 시장조성자로 역할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사실상 정부 역할 없이도 잘 굴러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성격에 맞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침략도 받고 고통 속에 절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들을 우리는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그리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신뢰하지 않고 상대 헐뜯기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내부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또 성공해야만 합니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권이 될 것이고, 저와 한나라당은 이 역사적 과업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기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현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반구대 암각화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000년 된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 당대에 이것을 훼손시켰다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께서 가급적이면 금년 중에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차일피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 ○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김형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문금 각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각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형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0시56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형 의원** 총리께 묻겠습니다.

충북 청주, 민주당 홍재형입니다.

총리, 요즘 세종시 문제로 정신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바쁩니다.

○**홍재형 의원** 국민은 참 어지럽습니다.

어제 원칙적인 당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국민이 반대하면 원안대로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것을 또 다시 오늘 ‘결연한 표시’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청와대로부터 혼나신 모양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제 소신대로 일하지 청와대에서 이리저리한다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홍재형 의원** 민관합동위원장 이규성 전 장관 영입, 잘 안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의한 적이 없습니다.

○**홍재형 의원** 그래요? 신문에는 그냥 작문이었던군요,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경제학자로서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청와대에 그렇게 약조를 하고 총리가 되셨는데 이규성 전 장관은 ‘이 문제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얽히고설킨 문제다.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원안이 최선이다’ 그래서 반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의원님은, 청와대에다가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니 경제학자인

제가 풀겠다고 한 적도 없고 또 이규성 전 장관께서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홍재형 의원**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판명이 되겠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얼마나 연구를 안 하셨나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총리께서 자족기능 7% 얘기하신 것을 20%로 올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20%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홍재형 의원** 좋겠다 하는데, 그것이 몇만 평의 7%를 20%로 올리겠다고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정확하게는 아마 2280만 평이고, 한 2300만 평이라고도 합니다.

○**홍재형 의원** 총리 내정되신 지 한 2개월 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내정된 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홍재형 의원** 그런데 아직도 세종시 개념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세종시라는 것이 법에 예정지역이 있고 주변지역이 있고 연기군 잔여지역이 있습니다. 2200만 평이라는 것은 그 예정지역입니다. 지금 주변지역이 한 6500만 평 되고 또 잔여지역이 5000만 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부를 안 하셔 가지고, 2200만 평 거기서 자꾸 따지는데 그것이 공부를 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청와대 말 듣고 수정안 밀어붙이겠다고 하신 증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의원님, 저보다 한참 선배이십니다. 대선배이신데, 지금 안이 없는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와대의 지시를 시시각각으로 받아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족용지가 부족한 현재의 계획은 그대로 두고 개발예정지는…… 지금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족용지가 부족한 현재의 계획은 그대로 두고 개발예정지는 공터로 방치하면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지정한 주변지역을 먼저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신도시계획 지침에도 300만 평 이상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15% 이상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형 의원** 후배님, 제가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몇만 평의 7%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물을게요. 지금 연기군 잔여지역을 앞으로 세종시에 포함시킬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형 의원** 그것은 중대한 발언이십니다. 그것을 선진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시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내정자 시절에 충청도민에게 섭섭지 않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충청도민은 총리께, 대통령께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논의 후에 정치권과 현재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이 수없이 약속한 대로, 한나라당과 대표가 약속한 대로, 실정법대로 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그것은 그때 논의가 잘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지금 수정 논의하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재형 의원** 제 시간 뺏기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행정도시 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우선 자구를 많이 문제 삼으시는데 충청인들한테 섭섭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내정 받은 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만약 했다면 그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진정한 제 말씀의 의미는 면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줄이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부처 이전 지역도 있고 또 다른 자족지역들이 더 있을 텐데 자족기능에 관한 것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거기에 표기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홍재형 의원** 저도 답답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부에서 자족기능 보완대책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총리께서 이게 실정법인데 그때 논의가 덜 됐다, 다시

이것을 고쳐야겠다 그러면 국민 중에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투표한 사람들이 그때 잘못 투표했다 이제는 바뀌어야겠다, 국민 신임투표하자 그러면 정부에서 받아들입니까? 한번 대통령께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역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후보 시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나타난 자구로만 해석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정치적 신뢰가 중요하긴 해도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바람직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형 의원** 국민 좀 그만 괴롭히세요. 국력 소모입니다. 백성과 싸우는 정부, 모두의 불행입니다. 총리께서 사회적 자본이 실물·인적·지적 자본만큼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 중에 신뢰가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어떤 글에서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홍재형 의원** 그것은 이제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다 알려진 공유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회적 자본을 스스로 고갈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구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어록을 한번 잘 보세요, 자구 얘기가 아니라 근본 취지가 문제니까.

서울시장 때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경선시에 계획이 확정됐으니 실현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 안 될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 친필 서명한 동영상 좀 내보십시오. 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나올 테니까 친필 서명한 것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도 수없이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백년대계를 이유로 다시 180도가 바뀌었어요. 아니, 2년 앞도 못보는 분이 어떻게 100년 앞을 바라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권, MB 정책 발표할 때 믿으면 손해다, 그런 국민의 인식이 확산되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욕먹는 일 손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이 그것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려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정당당하게 세종시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야지요. 몇 년간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어느 날 유감 표명하고 뒤집는다면, 지금 G20 유치했다고 자랑하시는데 국제사회에서 일구어언하는 대통령, 협상력이 있겠습니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치적 신뢰나 또 국가적 이익이나 하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이 있고 장기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고쳐야 한다면 고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재형 의원** 그것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인데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고 꿈수로 집권한 자는 꿈수로 파탄이 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는 지금 이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국의 대통령보고 ‘꿈수를 부린다’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홍재형 의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니까 총리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 좀 하세요.

총리, 2007년 12월 박근혜 전 대표 지원 유세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2007년 12월이요?

○**홍재형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기억이 안 납니다.

○**홍재형 의원** 기억이 안 나시지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명박 후보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행정도시 안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행복도시법 통과에 대표직과 정치생명을 걸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자본, 폴리틱얼 캐피털(political capital)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뢰를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다른 큰 뜻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만 저는 박근혜 대표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분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재형 의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 어느 분이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까? 총리께서 쓴 글에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다’ 그렇게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대신에 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재형 의원** 박근혜 대표를 존경하시면 박근혜 대표가 말씀한 대로 원안대로 추진하시고 총리는 사표를 고려하세요.

오늘 한나라당하고 당정협의 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했습니다.

○**홍재형 의원** 2008년 8월 박희태 대표는 ‘이제 행복도시는 걱정하지 마라. 행복도시는 역사적 사실이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앞으로 탄탄대로만 남았다’, 안상수 현 대표께서는 한 달 전에 세종시 원안수정 관련해서 ‘우리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9부2처2청을 이전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한나라당의 신뢰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행정도시 약속이 뒤집히면 한나라당의 공약에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마 한나라당 당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나라와 또 충청 지역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형 의원**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지역균형발전 이념과 국가에 대한 의무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세종시를 정말로 명품도시로 만든다면 바로 그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시만 하나 덩그러니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을 자족적 기능을 가진 명

품도시로 만든다면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의미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형 의원** 자족기능 타령을 이 정부가 1년 반을 했습니다. 제가 ‘자족기능 어떻게 했냐?’, ‘전제가 뭐냐?’ 물어보니까 9부2처2청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수정안을 갖고 총리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나가면? ‘아, 그것 오는 것 관계없이 하여튼 자족기능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위에 눈치 보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됐어요.

지금 정부가 세종시 땅을 얼마에 샀지요, 짐짓 느라고?

○**국무총리 정운찬** 땅 1평에 한 20~30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홍재형 의원** 참, 이걸 장학퀴즈도 아니고…… 223만 원쯤 돼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평균 비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홍재형 의원** 아니, 행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내서 산 금액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총리실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땅값을 냈다고요. 그런데 지금 30만 원이요?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 주민,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평당 그렇게 샀습니다.

○**홍재형 의원** 아니, 샀다니까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50만 원, 30만 원에 기업에 준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건 그거고……

하여튼 개헌을 하지 않는 한 MB 정권이 헌법적인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MB 정부가 헌법적 균형 이념에 대해서 정치적인 증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를 핑계로 해서 수십 년간 역대 정부가 지켜 온 수도권 규제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더 나쁘게 하고 어려운 비수도권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경북에서 조사한 겁니다. 8조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행정도시는 혁신도시와 함께 지방발전,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MB 정부는 효율이라는

말 가지고, 효율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나라 IT 경쟁력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IT 경쟁력이요? 아주 높습니다.

○홍재형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높습니다.

○홍재형 의원 아주 높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대는 3등이었는데 지금 16등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MB 정부가 삼질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효율, 행정효율 하는데…… 또 퀴즈 문제를 내야겠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홍재형 의원 그런 IT 들어보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홍재형 의원 스마트 워커 들어보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홍재형 의원 그런 걸로 하면 세종시가 100km 앞에 있어도 다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홍재형 의원 예, 하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IT 경쟁력이 3등에서 16등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재형 의원 모르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홍재형 의원 모르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왜 몰랐습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홍재형 의원 상당히 높다더니……

○국무총리 정운찬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나 하면 어떤 평가에서는, 평가를 누가 했느냐,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제가 다른 누구보다도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홍재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할 때……

○홍재형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학생들을 지역균형 선발로 4분의 1 정도를 뽑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세종시를 정말로 좋은 시로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그냥…… 제가 생각

하기에 또 제 동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중부지역에 그냥 덩그러니 한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형 의원 총리께서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쓰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무엇을 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홍재형 의원 지금 지역균형 발전 그것을, 그 정신을 이어 받아서요, 총리직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지역균형 발전 추진 좀 하세요. 세종시 제일 먼저 좀 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홍재형 의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아날로그식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총리 취임할 때 취임선서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했습니다.

○홍재형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을 총괄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재형 의원 어디서 하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홍재형 의원 어디서 하셨냐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대통령 앞에서 했습니다.

○홍재형 의원 텔레비전에는 안 나오던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선서를 안 하셨다고 해서 행안부장관도 안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서를 하셨으면 더 좋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직제 개정 후에 바로 이전고시를 했어야 합니다, 행안부장관이. 그런데 600여 일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세종시 원주민들이 행정소송할 행정소송감이에요.

핑계는 자족기능 보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반 연구를 했어요. 낙동강 환경평가는 3개월에 해치우고 예비타당성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1년 반 연구를 해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 사람들하고 또 총리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고시가 안 되었느냐 했더니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족기능 때문에 고민을 하느라고 그랬

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맞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홍재형 의원** 4대강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알았습니다.

만약 세종시를 행정기능을 빼고 자족기능 충분히 해서 수퍼 기업도시나 수퍼 혁신도시가 되면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혁신도시 하는 데가 몇 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혁신도시, 큰 광역시 10개 정도 됩니다.

○**홍재형 의원** 아니,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전국에 몇 개나 있냐고요, 혁신도시 하는 데가?

○**국무총리 정운찬** 정의에 따라서 10개도 되고 30개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형 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10개고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기업도시는 6개고요, 그럼 그 사람들 가만있겠습니까? ‘왜 충청도만 그렇게 해주냐?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다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홍재형 의원**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그러면 공공기관 노조들이 ‘왜 공무원은 안 가고 우리만 가게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공공기관의 이전과 중앙부처를 포함한 중앙기관, 중앙에 있는 기관들의 이전은 성격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형 의원** 아니, ‘공무원이 술선수범 안 하고 왜 우리만 변두리로 가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걸 참고하셔야지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평소에 좋아했던 정운찬 총리께서 성공한 총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구 좋아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좋아합니다.

○**홍재형 의원** ‘작가’라는 말 아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

○**홍재형 의원** 한번 찾아보세요. 정 작가가 안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실 때 갈등을 봉합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러셨는데,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실정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정도이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너무 처음에 수정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가지고 좀 빠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선배님 말씀대로 훌륭한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윤성** 홍재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규성 의원님 소개로 전라북도 김제시, 완주군 지역구민 마흔 분이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변제일 의원님 소개로 충청북도 청원군 청원고등학교 학생 8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어두운 경제위기 터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다른 나라가 놀랄 정도로 빨리 위기를 벗어났고, 몇몇 기업은 위기 전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G20에서 세계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출구전략을 쓸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지는 못했고, 단기적으로 강도 높은 처방을 하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커져서 나라 살림도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도 어려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험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의논하고, 바람직한 경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질문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정 파악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김재경 의원**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에 나라 밖은 물론이고 안에서도 금융시

시스템 감독기능이 제대로 되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아주 무성하다는 것은 듣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래서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다 이런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놓고 국회 내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문은 많이 듣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에다가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것이냐 또 기존의 금융감독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이 중심이 되고 또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금융안정까지 넣어서 좀 더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 애당초 한국은행과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주류적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체도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주자 이런 법안이 또 제안되어서 상당히 입장이 상반되는 이런 현상들이 정부 부처 내는 물론이고 국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다 장단점도 있고 또 논거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 안에서도 지금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좀 상반되고, 국회도 위원회끼리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총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하고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물론 한국은행이 굉장히 독립성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총리가 행정력으로 어떻게 감시 감독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서로가 이렇게 오래 가지고는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정자로서의 총리의 역할이 필요하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비공식적으로 하겠습니까.

○김재경 의원 입장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김재경 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가 보면 세종시 수정계획이 나온 뒤로 혁신도시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께서 며칠 전에도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건설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일각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일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하는 것이,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수도를 나누는 문제 내지는 부처를 이전하는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있고, 거기에 반해서 혁신도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낙후된, 소외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이런 경제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똑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런데 이 혁신도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아주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난 10월에 통합해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인데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본사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주택공사가 오기로 했던 우리 진주 지역과 그다음에 토지공사가 가기로 했던 전주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옛날을 되짚어서 보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명을 받고, 플래카드를 달고 거기서

좀더 강도 높게 나가면 삭발하는 사람이 나오고 단식하고 이랬던 것이 기존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의 관행이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또 우리가 구태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좀더 합리적이고 세련된 해결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는 공감을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관계부처하고 해당 지자체, 다시 말해서 전북하고 경남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고 앞으로 관련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국토부1차관이 위원장이 되어서 지방이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12월까지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경제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세 가지만, 국토부장관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총리님한테는 처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를 배치할 때 무작위로 막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 도시마다 고유의 기능을 준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사와 주택관리공사 그다음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건설 기능군을 거기다 배치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전주의 경우는 농업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이렇게 농업생명과학 중심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틀림없이 본사가 가는 데하고 안 가는 데는, 나중에 안 가는 쪽에서는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반열에 있는 새만금 개발, 그러니까 동북아 경제 중심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앞으로 수십조가 투입될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있고 또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된

아까도 말씀드린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통합 본사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상당한 개발의 대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원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도표를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정원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자본·예산 면에 있어서 거의 1.5배의 규모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었으니까 저 규모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오기로 했던 도시에서는 아, 우리 지역으로 더 큰 회사가 오기로 했는데…… 우리의 상식적인 상거래 관행에 의하면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것 같으면 큰 회사 쪽으로 본사가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한 세 가지가 분명히 합리적으로 우리 경제논리에 따라서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지금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소득세와 법인세 세제 개편해 가지고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하셨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드렸습니다.

소득세 인하는 경기부양에도 또 형평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문제지만 인하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커다란 것이 투자 부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촉진한다 또는 투자의 부진을 더 나빠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단 계획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재경 의원** 법인세에 대해서는 저도 총리의 견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기획재정부의 실무자 의견하고 총리 의견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 점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간에 8800만 원 초과라는 것이 과표구간 중에서 제일 높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마저도 35%에서 33%로 낮추겠다, 이라고 난 이후에 국가재정도 그런데 세수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잘사는 사람 세금 깎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보면 과표 구간을 위로 하나 더 만들자, 1억 원이든 1억 5000이든. 하나 더 만들 경우에, 또 거기에는 세율도 인하된 세율이 아니고 35%를 적용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들이 도표로 계산된 자료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1억 원으로 하면 한 4800억, 1억 5000으로 하면 한 4000억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8800만 원 구간을 33%로 이렇게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인하를 해 놓고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그걸 또다시 고친다는 것은, 이건 또 국가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소득이 높은 구간의 과표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요즘 아주 유력하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는 고려는 좀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사고를 경직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시 소득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환영받을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상속·증여세를 소득세율하고 같이 하자,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래서 세율을 같이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속·증여세는 어찌 보면 우연한 소득의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혹은 운이 좋

아서, 이런 건데 이걸 소득세하고 같이 맞춘다는 건 국민정서에는 아직 와 닿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자기 근로소득과 그런 소득이 세율이 같다는 것은, 이것 쉽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도 담보 상태에 있는데 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김재경 의원** 자, 총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여전히 많이 바쁘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관님 역할에 대해서는 다들 많은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성격이 있어서 이것 좀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어제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적 성격으로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 외에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제를 기능별로 전환하는 것이 투자 유인에 대해서 유인책을 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별로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기술 분야, 에너지 절약 시설 또는 환경보전 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등 기능별 투자 지원 세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 더 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경 의원** 지식경제부하고 입장이 좀 다른데 그건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무래도 산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임무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재정을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산업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을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전반적인 체계를 또 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 측면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해서 견지해 온 입장하고 좀 일관성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새 정부 출범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일몰 연장, 세율 확대 방침을 여러 차례 우리가 밝혔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그 연장과 함께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까지 변경을 했었고, 올 5월에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겠다고, 이렇게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해 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달에 금년 말까지 투자계획이 남아 있는 분들은 투자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러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기획재정부위원회에 세법심사소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법인세율 인하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세법소위에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지금 설비투자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더더욱 위축될 거다, 단계적으로 좀 폐지를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으로는 좀 이걸 유지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 듣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임투를 배제함으로써 설비투자가 크게 지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세법소위에서 전반적으로 조세 개편 체제를 놓고 논의를 할 때 의원님 말씀이 논의가,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키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 102개 계약 잔액 14억 달러, 중소기업이 91개 사 11억 달러, 대기업이 11개 사 3억 달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합치면 242개 사 3조 35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

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은행권의 설명 부족이라든지 이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가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이렇게 방향이 선회가 되면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우선은 그 사람들이 조정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상 금융감독원에서 조정을 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다고 그러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열여덟 건은 좀 합의를 시도를 해서요, 18건은 합의를 했습니다.

**○김재경 의원** 문제는 이렇게 그런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지금 소송에 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돈이 은행을 통해서 나오니까 딱 은행에 잡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칼자루를 쥔 사람과 칼날을 쥔 사람의 싸움이 돼 가지고 굉장히 피가 마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다 파악이 됐는데 은행이 여기에서 손해를 봤는지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다면 얼마를 봤는지 아마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 부분은 은행들은 대개 아직 소송이 다 결론이 안 났을 테니까 소송에 가서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손실로 부담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겁니다, 키코 거래를 통해 가지고.

**○김재경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뭐 법원도 판결을 하려 그래도 누가 손해를 얼마를 봤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종자 기능을, 역할을 하려 해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은행 측의 손익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영업비밀이라 해 가지고 내주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걸 실태 파악을 해서 뭔가 이게 방향이 바로잡힐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자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부모들과 선배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국가 시스템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정치는 양당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정권교체의 트랙 위에 올라 있고 경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눈부시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외교면에서도 마음먹은 국제행사는 다 유치하고 분단국가임에도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정치와 완전히 분리된 국방력도 우리를 지켜내는 데 충분하고 한류문화와 스포츠도 국위 선양에 손색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일시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어도 금방 주저앉을 정도로 우리는 허약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고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면서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국가적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성숙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재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김제 완주 지역 민주당 최규성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김제 완주 지역에서 핵심 당원 동지들이 방청석에 많이 와 있습니다. 당원 동지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 10월 28일 구미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식에 참석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랬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물 부족과 홍수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맞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렇지요. 바로 22조 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확보, 목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외 지역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4대강 사업의 출발점은 홍수 예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가뭄도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런데 홍수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강물이 강을 넘치는 범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최근 10년 동안 4대강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대개 평균 홍수 피해액이 1조 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렇게 들었지 실제로 60년대 70년대에는 4대강 유역에 홍수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10년에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맞습니다.

○최규성 의원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강원도와 경북, 경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예, 강원도 지역이 주로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4대강과 상관이 없는.

지난 2002년 루사 또 매미 태풍 때도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피해를 입었고 국가하천은 3.6%밖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렇지요. 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금년 7월의 홍수가 서울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피해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한강이 상대적으로 홍수방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성 의원 잘 되어 있었지요. 자료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게 다 뭘니까? 다목적댐이지요, 다목

적댐. 홍수 예방, 물 확보 경우에 따라서는 수력 전기, 이 다목적댐 총리님 눈 감고 외울 수 있습니까? 다 못 외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못합니다.

○최규성 의원 저렇게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지역에는 홍수 딱, 물 확보 걱정 없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최규성 의원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홍수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홍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지방하천 예산은 오히려 3600억 감했고 그리고 4대강 지역에 홍수 예방한다고 잔뜩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것 등이 가려운데 다리 끊는 격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목적댐들이 홍수 방어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 없지만 아직도 4대강이 홍수에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한강보다 길이가 길지만 한강에 비해서 댐 홍수조절능력이 한 30~4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낙동강에 댐 몇 개나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보를 설치한 후 홍수기 때 유속이 오히려 느려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건설 전보다? 보세요.

홍수를 막기 위해 5.7억t을 준설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 16개의 보를 설치하는데 보를 설치하면 홍수가 예방이 됩니까, 아니면 홍수에 방해가 됩니까?

저것 보세요. 아까 자료 보셨잖아요. 유속이 느려지면, 보를 설치하면 홍수가 더 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4대강에 설치하는 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가동보입니다. 그래서 홍수 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할 수 있고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 시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가동보,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홍수를 가정하면서, 그런 홍수에 가동보라고 그게 장애물 안 되는 겁니까?

다음 자료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다리입니다. 올 7월 달 제 지역 완주 지역의 다리인데 저 다리가 바로 홍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비가 오면 가동보든 무슨 보든 강 안에 있는 것은 다 홍수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성 의원 아까 저 다리가 홍수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가동보든 뭐든 200년 만에 한 번 큰 비가 왔다, 그러면 강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다 홍수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게 홍수를 방해하고 물을 빼게 하는 겁니까? 다리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홍수 방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상식적인 겁니다. 자료 보여 드렸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다음 자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면 홍수위가 저렇게 상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의 건설은 홍수에 도움이 아니라 홍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 강에 보를 설치한 세계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왜 댐을 안 만드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댐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충분한데 아까 홍수 예방한다고 보를 설치한다는데 세계적으로 보를 설치한 예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처음으로 해 보자 그런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그것은 지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홍수를 막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 또 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설치하고, 이게 다 이윤배반적인 겁니다. 홍수 예방과 물 확보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보였듯이 부족하면 댐을 더 건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댐 건설이 지금 굉장히 힘들  
니다, 요새. 왜 그러냐면요 기술은 있지만 현  
재……

○최규성 의원 댐 건설 20개 했고……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건설 적지가 적고  
또 수몰로 인한 환경 훼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에 대해서는 지역 반대가 굉장히 많이 있  
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홍수 예  
방과 물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건설하고 지금도  
저수지 만듭니다.

다음에는, 올해 물 가뭄이 심각했는데 어느 지  
역들이 물 가뭄이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로는 역시 또  
강원도……

○최규성 의원 강원도 고산지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그다음에 자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세요. 낙동강 유역 물  
부족하지 않습니다. 2011년에 물 남고 2016년 가  
도 아주 조금 부족한 것 아십니까? 그런데 물 확  
보 필요하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말이 됩니다.

○최규성 의원 아니, 저기 물이 남는다는데 거  
기다 무슨 10억t의 물을 확보한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가뭄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최규성 의원 그러면 수자원 종합장기계획은  
영터리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목적이 지금 그것뿐이 아  
니라 하천유지 용수 또 침수 공간 조성, 이런 것  
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성 의원 물이 부족하면 댐을 더 건설하면  
되는 것이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2009년 6월 5일 이만의 장관이 KTV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의 양이 많  
아지면 유속이 빨라지고 녹조 현상도 막고 수질  
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총리께서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보……

○최규성 의원 보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 보를  
막아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유속이 빨라지고 녹  
조 현상도 막고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동의하십

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문자 그대로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다른 조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규성 의원 힘들지요? 이것 이만의 장관이  
맞지 않는 얘기 한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그것은 여기 와 계  
시니까 이 장관님께 한번 여쭙 보는 게 어떻겠습  
니까?

○최규성 의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자료를 보세요,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보를 막으면 칠곡보-강정보 사이의 물은 40배  
유속이 느려집니다, 40배. 다른 데도 20배, 이렇  
게 유속이 느려지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혹시 의원님이 보 설  
치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최규성 의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무래도 유속이 느려지면  
녹조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질 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총 인 처리시설 5000억 원 투자로 녹조  
발생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 확충 등으로 오염원  
을 저감하고 또 갈수기에 풍부한 수량 확보를 계  
획하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것은 보 안 막고도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것은 해야 되시  
고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도 얘기했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고인 물  
은 썩는다’ 만고의 진리 아십니까? 이것 부정하  
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자체로서는 맞는 말씀입  
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

○최규성 의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40배 정도로 물이 느려지면 썩게 되어 있어요.  
물의 생리가 그런 겁니다.

두산건설이 제출한 낙동강 32공구·24공구 자  
체 수질 모의실험 결과, 회사가 제출한 겁니다,  
가동보가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결  
과를 가정하더라도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만 두산건설  
등이 시행한 수질 예측은 환경부의 수질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모의실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러면 두산건설이 엉터리 보고 했네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이것이 나오기 전에……

○**최규성 의원**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보를 건설하면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생명의 젖줄로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4대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어렵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인정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얘기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환경기초시설, 다시 말해서 하수나 폐수처리장 등을 대폭 확충해서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규성 의원** 그다음에 4대강과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각 부처가 4대강에 돈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니까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한테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때냐?’ 하니까 수자원공사가 ‘이것은 돈 투자해 봐야 수입도 없는 그런 하천사업에 우리가 투자할 수도 없고 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업이다, 자신이 할 수 없다’ 이렇게 8월 27일 날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당시 수공에서 투자비 회수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자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자료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인 방안이 저것입니다. 총리가 주재하고 재정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런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8조 채권 발행해라. 이자 우리가 물어주겠다. 그다음에 돈 안 벌리면 우리가 나중에 다 채워 주겠다’……

잘 보세요. 저렇게 결정했습니다. 저 결정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공이 거기 참여하게 된 것은……

○**최규성 의원** 아니, 저 결정이 정당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느냐는 얘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커다란 불합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성 의원** 아니, 이자 4000억 부담하는 예산 그것을 장관들이 결정합니까, 국회가 결정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결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장관들이 그런 건의를 해 보겠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8조 채권 발행해서 투자해라’ 이것은 수공을 기만한 겁니다. 수공이 안 하려니까 꼬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한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내가 해 줄 테니까 투자해라’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수공에 투자를 권유를 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국회에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국회가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4000억 그것 인정 안 해 주면 사기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국회에서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규성 의원** 물값 올려야지요, 물값. 수공이 올릴 수 있는 것은 물값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정운찬** 물값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광역상수도 건설이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원가……

○**최규성 의원** 그러면 수공 망해야지요. 4000억 이자를 국회에서 앞으로 매년 승인을 하라는 겁니다, 기한 없이. 승인 안 해 주면 수공 망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기예요, 사기. 결국 국민들한테 4000억 물리게 하면 그것도 국민에 대한 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나중에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게 할 테니까……

○**최규성 의원** 아니, 돈 안 들고 준설해서 무슨 돈이 벌립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수공이 안 하

겠다고 한 건데 ‘걱정 마라, 채권 발행하고 이자 우리가 평생 물어주겠다, 백년 천년 물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런 약속은 무효인 것이고 이런 약속에 의해 기만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당시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수공에 좋은 금융 조건을 제공한 것은 역시 또 수공도 하나의 회사인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려고 하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 800억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십년 백년 계속 국회에서 그것 통과시켜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인 것이지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지금 총리가 임명되기 나흘 전에 한승수 총리가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옳지 않지요, 이것?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불합리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성 의원 법에 근거 없는 결정을 하면 불합리한 거지요. 권한이 없는, 이자 부담은 국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건데 왜 총리가 그런 결정을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자는 내년에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규성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이자 지금은……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권한이…… 예를 들면 4000억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부담해 줄 테니 채권을 발행하라’ 이것은 사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문구는 못 봤습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최규성 의원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총리께서는 그런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한 없는 짓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국회 권한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4대강 사업은 계획 자체가 부실한 졸속 사업이며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업입니다. 또한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개선은 허구이며 사실상 낙동강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홍수 피해, 수질 악화, 물 부족 등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투자되어야 합니다. 졸속·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대운하 의심 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규성 의원 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대운하를 위한 준비 작업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악화, 이것도 다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쌀값 대란으로 농민들이 생존의 위협에 농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쌀값 문제는 저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이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서 혹시……

○최규성 의원 장관 안 왔어요, 오늘.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장관 안 왔다고요, 오늘.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까?

○최규성 의원 차관 쌀값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정운찬 좀 양해……

○최규성 의원 그냥 별문제 아니니까 들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총리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10년 전 쌀값이 1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3만 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쌀값이 폭락하면 농민 소득이 줄어들고 손해고 그런데 정부는 떨어진 만큼 변동직불금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예산도 낭비가 있는 것입니다. 쌀값 1만 원 떨어지면 정

부예산 5000억 원 들어가는 사실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렇게 들어가지요.

지금 쌀값 14만 5000원으로 계산해도 약 5000억 원의 변동직불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계속 제가 10만t 매입해야 된다, 10만t만 더 매입해 달라고 전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장관께. 그런데 걱정 말라고 해 놓고 안 해 가지고 2008년도 쌀 재고가 남아 가지고 그것이 5만 4000원 하던 쌀이 3만 8000원, 4만 원에 팔리다 보니까 쌀값이 폭락을 해서 지금 다시 신곡은 4만 5000원 수준이 된 것입니다. 잔곡 매입을 하지 않은 정부 정책이 바로 쌀값 폭락의 원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름하고 초가을에 걸쳐서 서너 차례의 대책을 통해서 2008년산, 2009년산 초과분을 매입토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는 했었습니다만 시장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규성 의원 저도 30년 장사를 했는데요. 시장가격은 제일 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시장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들였어야 하는데 마지막 10만t 안 사는 바람에 그 모양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옥수수 1만t 중국에 보낸다는 얘기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중국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사서……

○최규성 의원 아, 중국에서 사 가지고 보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옥수수 식용으로 먹습니까? 이것 안 먹잖아요. 소나 돼지나 먹는 사료용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사료용도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북한 사람들에게 대북 지원한다고 사료용 옥수수 보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사료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식용을 보내드리는데……

○최규성 의원 아니, 지금 남한에 쌀이 남아돌아서 창고가 넘쳐서 죽을 지경인데, 농민이 눈 갈아엎고…… 쌀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비싼 외화 들여서 옥수수 사서 보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마 쌀 문제는 국내 수급의 문제하고 또 대북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북한 당국은 정부 옥수수 1만t 지원 통보에 대해서 2주 넘게 답을 않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이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 있습니다. 매년 40만t의 쌀을 차관이나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했는데 이것 2년간 안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연속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규성 의원 하여튼 대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2005년 수준의 58만t을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테크니컬한 것은 잘 몰라서 58만t이 적정인지 어떤지는 제가 금방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부가 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시 쌀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적정 재고량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직불금 줄 돈 반절만이라도 쌀 비축하는 데 투자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제대로 연구하시고요.

그다음 자료화면, 새만금 자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23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방수제에 대해 농업용지 54km만 우선 추진하고 생태환경용지 등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생태환경용지 구간에 방수제가 없으면 홍수위를 기준으로 최소 3m 이상 더 매립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65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되며 평당 20만 원의 분양가가 상승되는 등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리, 생태환경용지 구간에 방수제 건설이 시급히 결정되어야 된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이 방수제가 건설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지난 10월 출범한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새로 선임된 상임이사, 이 자료 봐주세요, 7명 중 호남 출신은 1명도 없고 영남 출신은 3명이나 됩니다.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전체 15명 이사 중 영남 출신은 8명이고 호남 출신은 1명, 전북 출신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이것 어찌 이런 지역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좀 적네요. 좀 적어요.

○최규성 의원 좀 적어요? 영남 8명이고 호남은 1명인데…… 아무리 영남 정권 잡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총리께서 시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규성 의원 총리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면서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기업 임직원들 지역 내려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은 내려가지 않으면서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 ‘너 내려가라’ 그러면 ‘저는 안 가면서 나더러 가라고, 웃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규성 의원 저는 안 가는데 우리더러 그 어려운 데, 지역에 멀리 가라고 그러면 밑에 산하 기관들이 웃긴다 그럴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정부 부처도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최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에서 국민과 소통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시장만능주의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경제 논리와 효율성도 좋지만 모든 현안을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속에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고 흉수 예방도, 물 부족도, 수질 개선에도 문제가 없는 4대강 사업을 편법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액 증가에 대한 눈속임을 위해 수자

원공사에 8조 원의 사업비를 떠넘기는 꼼수도 대담하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리고 하루 빨리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국민통합 정신을 되살려 한국 경제의 불씨를 다시 살려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최규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는 의원입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잠시 전부터 정해결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인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 주민 무려 110명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정해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한나라당 정해결 의원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 찾아 주신 어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하게 되고 의장국으로 승격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뻘뻘로 데이라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11월 11일 오늘은 제14

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행한 국가적인 기념일입니다.

농어민 여러분, 참고 견디며 열심히 삽시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오늘 국회에 와서 느낀 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정당은 정당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대결을 해야 하는데 싸움만 하는 국회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집에 인터넷을 보고 있는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도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의의 참전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둘째로 국회에서 '존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하면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치스러운 국회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고 총리님이나 장차관은 존경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우리 모두 서로가 아닌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농업은 민족 산업이며 생명 산업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죄송스럽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정해결 의원 오늘 농업인의 날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옛부터 농업은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용어를 빌린다면 우리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또한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또한 국방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방이 없으면 나라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정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농업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풍년을 이루

었음에도 쌀값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의 경쟁력과 또 일상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정해결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토요일·일요일 되면 자주 참 나갑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은 참 잘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따끔하게 길들이고 있다고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지역주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커다란 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해결 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컷 퍼 주고도 뺨 맞는 그러한 짓은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이제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굽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퍼 주다가 안 주면 서해교전 같은 행패나 부리고 또 그런 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 끌려가는 정책은 하지 말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정해결 의원 그다음 총리님, 우리나라가 물 문제가 심각하고 물 부족 국가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정해결 의원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면 전에는 '서울 사람은 수돗물 맑은 걸 먹고 우리는 왜 수돗물이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낙동강변에 사는 경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참 잘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96개의 농업용 저수지 뚫높이기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희들은 농업용 저수지 뚫높이기 사업은 홍수나 가뭄 피해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자원 확보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수확품종 재배라든지 또 사계절 다목적 용수공급 등으로 물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계속해서, 야당이 예산을 엄청나게 깎는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추진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산을 많이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정해걸 의원**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해걸 의원** 총리님, 정치인이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여러 분들이 이 장소에서 '신뢰'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정해걸 의원** 예,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신뢰가 없는 정당은 쓰러집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무너집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지금 정치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농민들 전체가 우리나라의 4900만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를 준비하고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합니다.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더 해 나갑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농어촌의 의료 문제입니다.

영상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응급의료시설의 사각지대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이 우리나라에 마흔세 군데나 됩니다. 또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는 군·구들이 28개 군·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출산소, 분만소가 없는 곳이 47개나 됩니다.

이래 가지고도 우리 농촌이 문화 혜택을 받거나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 게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해걸 의원** 예, 헌법 제36조3항……

○**국무총리 정운찬** 예, 보건의에 대한……

○**정해걸 의원** 보건의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농민에게는 이 헌법 제36조가 무색한 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결과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 보건복지 5개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보건의료시설 및 인프라 격차로 생기는 의료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직접 체험은 못 했습니다만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해걸 의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농촌,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또 출산소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는 곳을 총리님 직접 다녀 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앞으로 견학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지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해걸 의원**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민족산업임을 인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정해걸 의원** 그런데요 예산이 형편없어요. 예산이 2000년도에는 9%였는데 줄고 줄고 줄고 줄어서 2010년도에는 5.9%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일단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경제 위기를 맞아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농촌 분야라든가 농업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던 돈을 빼고 나면 다른 부분도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 대비 증가율이 6.5%로 국가 전체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훨씬 더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농림어업이 전환이 되면서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농어가 비중 또는 농어가 인구 비중 등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해걸 의원 장관님, 예산 배분 기준은 비교우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됩니다.

○정해걸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여러 가지가 다 고려가 됩니다, 종합적으로요.

○정해걸 의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촌에서 만약에 논밭에 경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공해나 재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치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

○정해걸 의원 우리나라의 수해와 예방·복구와 수해 복구의 피해액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말씀하시지요.

○정해걸 의원 수해 피해는 2조 4000억이 되고 예방은 1조 1000억이 됩니다. 복구는 4조 2000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1년 평균치입니다. 2001~2006년까지인데 만약의 경우에 논밭에서 우리 농민들이 경작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십조의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효율성이나 비교우위의 기준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가장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5.9%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정부는 FTA 등의 체결에 따라서 개방……

○정해걸 의원 21조 얘기하시려고 합니까? 그것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말고요, 예산 이야기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안 됩니다. 농업 예산 2010년이라도 10% 이상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얘기하면 댐 그런 얘기만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건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중소규모의 저수지를 많이 막아

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건의를 하고 부탁해도, 농수산장관님이 저기 와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건의를 해도 예산을 쥐고 있는 부처에서는 5개를 겨우 만들었습니다.

이게 농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SOC사업인데 이것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신규로 5개 지구에 1825억을 넣어 놔는데요. 2009년도의 3098억보다 반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래도 물 부족 국가를 위해서 정부가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

○정해걸 의원 답변 안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을 유의해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조기 집행을 많이 강요하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정해걸 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서……

○정해걸 의원 정부에서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빌려 씁니다.

그 이자가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4%~5% 이자를 주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1%밖에 안 보태 주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빚진 데다가 계속 빚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조기 집행을 강요하는 것도 좋지만 강요를 시킬 때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경기 진작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부도 지금 의원님……

○정해걸 의원 그 빚이 그 빚이다 이런 말씀 하시려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니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인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이런 문제는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정해걸 의원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못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방정부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농특세, 통합세로 하려고 하다가 교육세하고 농특세는 못 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정해걸 의원** 교통세만 갔지요, 2008년도에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정해걸 의원** 농특세는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농특세뿐만 아니라 교육세도, 저희들이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교통세만 통과가 되고 교육세와 농특세가 국회에서 펜딩(pending)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목적세를 폐지하고 본세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편안 내용을 지금 결국 유예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지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관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나오시지요.

우리 장관님 하니까 대번에 알고 나오시네요.

어서 오시지요.

현재 우리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쌀값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감사합니다.

쌀은 농업에서 또 농업 소득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품목입니다. 또 쌀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도 쌀값을 안정시키고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생산량에 관계없이 281만t을 매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에 평년작보다 수확이 더 되는 수량은 그 수량이……

○**정해걸 의원** 저 보고 하시지 말고 국민들 보고 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수량이 얼마가 되든지 매입해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정부양곡은 시장에 방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부보유미 중에서 고미는 특별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가공산업 육성

등 소비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수급 대책을 추진해서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쌀값이 불가피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농가의 소득이 보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걸 의원** 올해 468만t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정해걸 의원** 437만t 이외에는 모두 수매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금 통계청에서 새롭게 마지막 수확량, 실제 수확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수확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더 수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FTA 때문에 농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 대책을 많이, 한 40여 가지 내놨는데도 아직 잘 안 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읽어 열거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것 서면으로 제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것 보시고 꼭 좀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전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농가부채의 주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농가부채는, 최근에 농가 경영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농업 이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비용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가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걸 의원** 농기계가 한 30% 넘거든요. 그래서 농가부채 있는 농가들을 돕는 방법이 경영회생자금 농지매입…… 내용 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걸 의원** 2300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3000억으로 늘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내린 것은 좋은데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다시 내려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좀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고맙습니다.

농기계은행사업 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걸 의원 이것은 임대사업에서 어디로 바뀌야 된다고 저희들이 늘 주장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임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정해걸 의원 영농 대행작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조선시대 제 선조님이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저 농업이란 장사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공장만큼 편리하지 못하며 선비만큼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3재(三才)가 어울려서 생명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농업을 이문이 나도록 도와주고 농사짓기 편하게 해 주는 것이 농민을 위한 어엿한 정부로서 수행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정해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외국에서 오셨네요—정장선 의원의 소개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업인 등 9인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은 유원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입니다.

오늘은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며 4대강 예산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는 주제로 대정부질의를 할까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총리님, 서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을, 계층별로 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 시장경제에서 서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경쟁 과정에서 처져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유원일 의원 직업군으로 말한다면요?

○국무총리 정운찬 직업군은 아무래도 노동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노동자·농어민·영세자영업자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유원일 의원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서 대부분 보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직 감은 잡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중도실용 서민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는 서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뭐 외국에서 수입한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감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유원일 의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노동조합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기댈 언덕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쌀값 소중하지 않습니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형 마트 규제……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금융과 화폐를 전공한 경제학자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유원일 의원 오늘날 세계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위기의 진앙지는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실물적 요인하고 금융적 요인 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물적 요인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 생산한 것에 비해서 소비를 많이 했고 또 미국의 소득분배가 70년대 이후로 그야말로 악화

일로에 있었던 것이 실물적 요인입니다.

금융적 요인으로는 금융기관들이 파생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었고 또 금융 회계를 그야말로 일반적인 자유를 넘어서 자유롭게 했는데 그것을 감독하기는커녕 방조 또는 방치한 데도 이유가 있고, 또 금융기관들이 금융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약탈적 마케팅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해법이,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의 자유화나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서민에 대한 약탈적 돈놀이, 월가 모델을 표준으로 한 금융 세계화, 국내외 금융 감시·감독 체제 미비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미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래요, 오늘날 세계 각국은 빈곤과 양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한국 말씀이십니까?

○**유원일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아무래도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국제화 또는 세계화를 우리가 겪었는데 국제화·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거기 잘 적응한 사람들은 정말로 잘나갔고 거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좀 처진 것이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시장만능주의 금융자유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프리드먼 등 비롯한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이 주창하고 80년대 초반 영국 대처 수상, 미국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히 추진됐다고 봅니다.

이 시장만능주의 금융자유화정책이 세계 각국 빈곤을 심화시키고 양극화 사회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시장만능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금융자유화 또는 금융자유화 그 자체는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가 지나치고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부작용은 많이 있지만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 또는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를 금융규제의 완화에다만 두는 것은 반드시 옳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시장만능주의가 왜 빈곤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것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지 않고 미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통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 경제는 이른바 민주적 자본주의다, 데모크라틱 캐피털리즘(democratic capitalism)이다 해서 정부나 기업이나 소비자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회의 조화를 이루면서 임금도 의논해서 정하고 물건 가격도 어느 정도 의논해서 정한 면이 상당히 있는데 70년대 이후로는 이른바 슈퍼 자본주의 또는 슈퍼 캐피털리즘(super capitalism)이라고 그래 갖고 경제 운영의 양태가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건을 싼값에 사려고 하고 또 동시에 투자자로서, 자산 투자자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에 정부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기관들이 관여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슈퍼 자본주의 체제에서 결국은 양극화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대변은 몰라도 대개 경제학자들이 시장에 대한 믿음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잘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강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경쟁에 맡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이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맹신하고 있고 자기들이 아쉬울 때만 정부를 찾고 있어요. 이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꼭 아쉬울 때만이라기보다 아쉬워지면 정부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자유로운 활동 속에

서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율, 자유들을 추구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자들도 아무래도 정부에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어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원일 의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유원일 의원** 이들은 규제완화, 세금 감축 등을 통해 작은 정부를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것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일 의원** 이들은 규제완화, 세금 감축 등을 통해 가지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부분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렇지요?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적하(滴河)효과가 있지요? 이게 어떤 효과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기업 활동이,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될 것이고 동시에 대기업보다 못한 사람 또는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결국은 혜택을 본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down effect)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원일 의원**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에 적하효과에 대해서 귀 따갑게 들었거든요.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이 따뜻해진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지원이 서민 생활과 직결됐습니까? 서민에게 부유가 왔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나 이것은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이 잘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이 반드시 잘된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대기업들이 잘되어야…… 또 다른 데가 안 되고 대기업이 잘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잘되면 그 영향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한테도 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원일 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투자는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습시다만 현재 한국 경제는 굉장히 높은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첨단기술이 필요한데 첨단기술의 개발이 지금 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저희가 볼 때는 그들은 자기 이득은 다 취했다고 보거든요, 대기업과 재벌들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부자 감세나 세수를 적게 내서 이익을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아웃풋(output)이 없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감세, 세금을 깎아 주면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 줬는데 왜 투자 안 하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투자 대상이……

○**유원일 의원** 그런데 그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복지예산 같은 것이 줄어들어서 서민 생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복지예산 또는 복지를 위한 활동들이 전 사회에 스며들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2010년 예산을 보게 되면 복지예산이 절대적으로도 많이 늘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유원일 의원** 실제 더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소외계층이나 서민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율보다는 훨씬 낮은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유원일 의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화하고 양극화 확대를 가져오는 논리의 구조이고요 정책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공유하시지요?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국무총리 정운찬**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예.

들어가지고,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IMF가 요구한 4대 개혁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대외적으로 물론 10여 년 전에 IMF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의했던 것 중에 비판을 받을 대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러나 어쨌든 IMF과 같이 협의해서 했던 4대 개혁은, 특히 금융 개혁이라든지 기업 부분의 개혁은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유원일 의원** 예.

자본시장 전면 개방이 국민 경제와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게 단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금융 부분 뿐만 아니라 실물 부분에도 많은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투자로 인해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또 소득을 증가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금융기관과 알짜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투자 때문에?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그렇게 외국 자본을 그냥 일률적으로 국내 자본하고 구별해 가지고 다 투기성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이런 국제 금융시장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어떤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외국 자본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원일 의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요.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망한 중소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고액 배당하고 매각 차익 등 온갖 이익을 다 챙겨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렇지 않습니까, 투기자본이?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그것은 국내 자본도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투자해 가지고 배당을 얻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적

인 예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결론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원일 의원** 외환 위기 이후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지배는 심각하거든요.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실상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 부분에 조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은행들, 많은 은행들에 외국 자본이 대주주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의 점유 비중이 높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렇지요? 대부분이……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래서 저희가 금융 부분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 자본을 적정하게 이러한 금융 부분에 유도할 수 있는 그동안의 법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금·산 분리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유원일 의원** 금융기관, 시중은행 같은 건 66.14%, 그리고 10대 재벌에 관계된 10대 대기업 39.1%가 이미 외국인 소유가 돼 버렸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알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이런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습니다.

**○유원일 의원** 이게 국부 유출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그렇게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한국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지금 90%가 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또 그쪽에서는 국부 유출이지요. 물론 과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원일 의원** 시중은행의 66%가 외국 자본에 넘어갔는데……

**○금융위원장 진동수** 일부 시중은행이 그렇지요.

**○유원일 의원** 이게 7개 시중은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외국기업들이 말입니다. 외국 자본이 매각 차익률을 얼마나 남기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그대신 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27만~2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요, 수출도 500억 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것은 기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조업 말고 은행이나 또는 비생산적인 요소에서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것이 외국 자본이나 국내 자본이나를 묻기 전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원일 의원** 이들은 국내 기업을 인수해서 적게는 수천억에서 크게는 수조 원씩 차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과세할 부분은 과세를 하고 또 그러한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한 고용도 창출하고 또 우리나라 금융 부분이나 실물 부분을 발전시키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원일 의원** 그런데 론스타 펀드 같은, 외환은행 같은 것 대책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 올려서 의원님,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밖에서 상당한 우리 경제에 반(反)외자 정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로 거론되는 것이 그 론스타 관련 부분인데요. 어쨌든 불행한 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쪽에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러면 투기 자본이 왜 문제인지 제가 드린 질문지에 아홉 가지 유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이 질문 시간을 아끼시려고 저보고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요. 의원님이 소위 투기 자본의 문제로 지적하신 것을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내 자본에 비해서 너무 배당을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유상감자 같은 것도 한다, 그다음에 구조조정도 좀 국내 자본보다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환투기를 하는 게 아니냐, 적대적인 M&A를 하는 게 아니

냐, 그다음에 어떤 이중과세방지협정 같은 것을 회피해서 적정하게 세금도 내지 않지 않느냐, 공공성 특히 과생상품 같은 것에 주로 주력하지 않느냐, 기타 여러 가지 회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소위 이러한 외국 자본으로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핵심 산업 같은 데는 원천적으로 외국 자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소위 투기성 자본이 어떤 적대적인 M&A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개설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일 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기 자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지금까지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아니에요? 정부가?

○**금융위원장 진동수** 속수무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러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과세할 부분은 과세를 하고 저희 금융정책 차원에서도 예를 들자면 문제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도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외국 투기자본을 도와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과 유착관계를 맺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법집행이 불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글썽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정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유원일 의원** 김앤장이라는 책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이들을 돕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고위 공무원 3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국익과 서민의 삶에 얼마나 해악

을 끼치는지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유원일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금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혹시 위원장께서도 혹시 퇴직하면 거기에 가서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글썄, 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주시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러면 국가가 상당히 보장해서 잘해 줘야 되겠네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 부분에서……

○**유원일 의원** 그것 뭐 총리 시켜 주면 되겠네요?

저는 이런 투기자본들이 국내를 유린하고 또 국가의 국가관을 심어 주지 못하고 국내 시장을 상당히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 자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고요, 다만 최근에도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이 외국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이렇게 구별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와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원일 의원** 위원장님께서 27만 명을 고용을 창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들은 들어와서 하는 일이 정리하고, 또한 기업 쪼개 팔기 이런 것들을 갖가지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모두 정리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27만 정도의 고용효과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외환위기 이후 30개 계열 그룹 중에서 14개 계열 그룹이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또 국내 기업들도 이보다 더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외국 자본

이 하는 구조조정은 나쁘고 국내 자본이 하는 구조조정은 좋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것이 그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증가시키고 필요한 구조조정인지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것은 이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러한 이익이 우리 경제를 위한 이익과 또 상통한다면 필요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원일 의원** 예, 그들이 우리 경제와 상통하면 필요한 구조조정이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뭐……

○**유원일 의원** 예, 물론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무관하게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글썄, 뭐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원일 의원** 만도기계의 사례 같은 경우.

○**금융위원장 진동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동정책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구조조정이라면 그쪽에서도 적정히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일 의원**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시고요,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획재정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08년 이후 세계 개편 세수효과 자료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유원일 의원** 이것을 보면 2008년도~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5년 동안 줄어드는 세금고는 89조 원인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말씀하신 89조는 국회예산처에서 아마 누계 개념으로 발표한 숫자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계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순액법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연간 세수효과를 반영하는 순액법인데요. 이에 반해서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별도로 세수효과를 일정기간 동안 누적해서 발표하는 누적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순액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 순액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아니, 기년도 대비 방식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말씀하신 방식은 누적법에 의한 숫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89조 원 자체는 기년도 대비해서 나온 수치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 순액법으로는 한 33조 정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국가는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하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유원일 의원** 좀 줄이려고 그러시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세제 기법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원일 의원** 계산 방식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이것은 줄이려고 한다고 의도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유원일 의원** 그렇다고 보고요. 감세 89조 원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이 2008년에 세제 감면 디자인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가 중산 서민층이나 중소기업에게 귀착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런데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1분위 저소득계층은 1만 1000원의 감세 혜택을 보는데 10분위 고소득층에는 114만 9000원, 무려 백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부유층이 감세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게 아마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기획재정부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중심 쪽으로 미치는 혜택보다는 중산 서민층에 가는 효과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료가 그렇게 발간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저희 자료하고 다를 수가 없지요. 저희는 분명히 114만 9000원, 뭐 일단 1인당 본다면 분명히 맞는 것이거든요. 10분위가 114만 원이고, 1만 1000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틀린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유원일 의원** 예.

장관께서는 부자 감세를 통한 선순환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현될 수 있는 논리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이렇습니다. 감세 효과는 많은 연구기관이나 학자 연구소 전문기관에서 재정 지출의 확대하고 감세하고 효과를 비교하면 감세한 효과가 2, 3년에 걸쳐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직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를 통해서 투자가 창출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를, 일반적으로 많은 재정학자들은 감세 효과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런데 실제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은 0.6%에 불과하고요. 보통 소비 증가는 3.6%로 6분의 1에 불과한데요? 소비가 증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소비가 지금 이제 겨우 작년 한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유원일 의원** 1년이든 10년이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통계가 달라집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벌써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비 증가 같은 경우는……

○**유원일 의원**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쓰지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이 쓸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도 일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유원일 의원** 아니, 통계치에 6분의 1밖에 안 쓰는데 그게 어떻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소비지표를 통해서 보면 지금 민간의 소비가, 특히 3/4분기의 민간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까 서민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371억 원이 삭감됐고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무려

68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출해 놓고 있는 예산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년도 복지 지출 증가율은 8.6%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27.8%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일 의원** 계속 똑같은 얘기하시네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똑같은 게 아니라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원일 의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절대로 복지예산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원일 의원** 만약에 부자 감세 하지 않고 4대강 예산에 쏟지 않는다면 복지예산을 깎을……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부자 감세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원일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부자 감세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가 부자만 감세해 주고 서민을 어렵게 할 그럴 정부가 있습니까?

○**유원일 의원** 아니, 상위계층에 감세해 주는 게…… 소득세, 법인세 감세해 주는 게 부자 감세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지 않습니다.

○**유원일 의원** 서민이 소득세 내고 법인세 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다만 세금을 내는 층이 고소득 대기업 쪽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감세를 해 주면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를 유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원일 의원**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결국은 서민에 대한 지원으로도 이것이 이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원일 의원** 장관님, 그게 어떻게 해서 부자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유원일 의원** 부자 감세지 그러면 서민 감세입니까? 제가 서로 언성을 안 높이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경제 전체를 운용함에 있어서……

○**유원일 의원** 정부가 인정할 것은 하셔야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현상을 접근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방향을 찾는, 방안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원일 의원** 장관님 같은 말씀이 저희들, 국민들 듣기로는요. 황설수설로 들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요……

○**유원일 의원** 이것은 이분법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경제가 옳으나 틀리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유원일 의원** 이미 나타난 사업을 갖다가 왜 부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국 자본은 무조건 나쁘냐, 좋으나 이런 식의 접근은 저희들이 좀 경계해야 되거든요.

○**유원일 의원** 저기,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딱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원일 의원** 장관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유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난해부터 올 봄까지 태백시 정선군 쪽의 물가품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원** 4대강 사업이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물론 4대강 사업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태백 지역 문제는 국지적인 그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을 동시에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일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태백시가 정선군하고 714억의 노후관 교체 예산을 요청했었지요? 그것 얼마 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것은 우리 환경부에서 조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데 노후관 대체를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쥐어 하느냐 또는 위탁해서 하느냐 여러 방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국토부에서는 지금 광동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보조 댐을 건설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후보지도 찾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유원일 의원** 4대강 사업보다 어떤 게 더 선 순위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다 같은 순위로 지금 이 사업은 중요한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유원일 의원**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어떤 수익 효과가 있습니까? 국내에서 수익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적 수익 효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수익 효과라는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유원일 의원** 아니, 이익이 얼마만큼, 국민한테 얼마만큼 돈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우선 금액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보고드리듯이 물 부족 문제, 재해 예방 문제,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치수와 이수 면에서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유원일 의원** 장관님, 저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장관님 말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불필요한 사업을 해서 국론 분열만 오고 국민한테 혼란만 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 쓰고, 어차피 그럴 바에야 건설 재벌들 퍼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부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그렇게 허랑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유원일 의원** 그러면 어제 착공하셨지요? 금년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착공하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공사비로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유원일 의원** 아니, 4대강 예산을 썼다고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유원일 의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이미 벌써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 4대강 살리기로……

○**유원일 의원** 그러면 어디다 숨겨 놓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유원일 의원** 숨겨 놓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때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원일 의원** 장관님,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왜 거짓말하십니까? 어디다 숨겨 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그 돈을 내놓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유원일 의원** 얼마 들어왔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금 전체로 해서 한 8300억 정도가 전체 예산에 반영이 됐고 추경예산에 3500억 정도가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유원일 의원** 4대강 사업으로 반영했다고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원일 의원** 그건 경인운하 건으로 반영됐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유원일 의원** 경인운하 건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은, 왜 제가 의원님한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유원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유원일 의원**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예산을 집행했다면 헌법 제54조, 제55조, 국가재정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정중히 보고 드립니다.

○**유원일 의원** 그리고 이게 총액사업입니까? 총액계상사업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원래 이 사업은 그동안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데는 하천수계별로다가 총액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예산과정에서 심의하실 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일 의원** 아니,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3800억이 예산이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그것을 어떻

게 제가 의원님께 허위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다시 별도로 금년도 예산 내역을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일 의원** 예, 4대강 사업은 22조나 되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차피 이런 예산을 쓰려면, 건설 재벌 살려 주려면 아예 돈을 주십시오. 아예 쥐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복구비용에 아주 기하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환경 개선된다고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이 문제를 논할 때 우리가……

○**유원일 의원** 자, 강바닥을 훑으면 맨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수초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갈대가 없어집니다. 이게 수질 정화의 80%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강이 지금 퇴적토가 쌓여 가지고 강답지 못하고 지금 하상바닥이 강둑의 바깥보다 더 높은 강이 수두룩합니다.

○**유원일 의원** 수억 년 동안 가만히들 살아온 자연입니다. 가만됐어도 살아오고 강은 흘렀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가만히 그냥 방치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의원님.

○**유원일 의원** 그리고 혹시 여주보 때문에 세종왕릉이 문화유산 취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전혀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전부 검토했고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유원일 의원**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했다고요? 수중문화재 2개월 만에 조사 끝났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2개월 만에 조사 끝낸 게 아니라 그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는 소관기관에서 절차에 따라서 마쳤습니다.

○**유원일 의원** 참 답답하시네요. 그건 말입니다,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에 800m 다리를 놓다 보니까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취소됐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취소사례가 나올 수 있는 사례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일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소상하게 의원님께 별도로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일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유원일 의원** 지금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시장만능주의, 양극화로 신음하는 빈곤층과 서민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하도야마 정부의 자녀수당처럼 보편적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과 중산층이 살고 내수경기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로 세수를 고갈시키면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필요도 없는 4대강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으면 복지예산은 없어집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도 취소하고 이 예산을 서민복지와 중산층 복지에 투입해야 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추진하는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은 무너졌습니다. 금융투기를 부추기는 모든 법과 제도를 점검·재검토해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재고해야 합니다. 내수와 고용의 핵심인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200만 신용불량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00만 저신용자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유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현기환 의원 소개로 부산 사하 갑 지역구민 서른세 분, 그리고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전문위원과정 연수생 스물네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현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 갑 출신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치열한 과정을 압축적으로 겪어왔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선 지금 우리는 선진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물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조화되는 시대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주요 가치로 삼은 경제 살리기 방식은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실업 문제, 양극화 문제, 불균형 발전이 그렇습니다. 효율성만으로 국가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따뜻한 공동체정신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갈등은 줄어들고 진정한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할 것입니다.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율, 경쟁, 성장이라는 외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신뢰, 통합, 행복의 정신적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다들 이렇게 ‘세종시’라고 부르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모두 다 그렇게 불러서 그렇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것은 총리님으로서 좀 부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이나 명칭을 부를 때는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두순 사건’ 했을 때 느낌과 또 그 아이 이름을 붙여서 사건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현상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이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하는 것이 옳은지 세종시로 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행정복합도시는 길고 또 행복도시는 나름대로 거기 어떤 의미가 끼어 있는 것 같아서 세종시로 많이 부르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님 편의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불러도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길다면 흔히 그야말로 편의상 부르고 있는 행복도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본래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취지와 부합되는 그런 명칭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자족기능 부족을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현기환 의원 행복도시법 제6조를 혹시 보셨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봤습니다.

○현기환 의원 거기 제1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자족도시를 보완해야 된단,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말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취지가 균형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복합도시에 담을 것을 정말 명품으로 담아야 균형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족기능에 대해서는 거기 법조문에도 있고 또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선언적, 추상적인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현기환 의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자족도시가 이렇게 부족하다면 자족부분을 채우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자족기능지역을 좀 더 넓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데 법에 6.7%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고치려면 제가 법률적 지식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한 법이나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님,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행복도시건설 전체를 수정해야 된단, 법을 바꿔야 된단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앞으로 수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는지, 고치지

않아도 되는지는 나중에 결정될 문제입니다.

○**현기환 의원** 자족기능과 관련해서 행복도시법을 보면 기본계획이 있고, 개발계획이 있고 그리고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장관이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또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충분히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명품도시' 이렇게 하면서 행복도시 전체를 수정해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당초에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기환 의원** 두 번째로 총리님께서서는 행정기능의 비효율을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말씀드렸습니다.

○**현기환 의원** 행정 비효율에 대해서는 2005년 법 제정 당시에 여야 간의 열띤 논쟁이 있었고 백열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비효율에 대해서. 그때 토론되지 못한 새로 발견한 비효율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당시에 벌써 여러 가지 행정 비효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논의와 함께 심지어는 개헌논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집행제로 해서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총리는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에 있다든지 그런 식의 논의까지 있었으나 그 논의가 계속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 당시 비효율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비효율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비효율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의는 있었으나……

○**현기환 의원** 그러니까 총리님께서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이 많은 속기록과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총리님 다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다는 못 봤습니다.

○**현기환 의원** 엄청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의 토론은 멀리가고 지금 새로이 비효율에 대해서 토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다는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끝까지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님, 정부 부처가 효율성만 따진다면 모여 있는 것보다는 분산돼 있는 것이 비효율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요, 분명히. 또 총리님 말씀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광화문, 과천 그다음에 대전청사 이렇게 나뉘져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비효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정보 전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국방부하고 삼군사령부 등은 각각 서울 용산과 충남 계룡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방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IT 기술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발달이 되고 있고 또 지금은 제2고속철까지, 시속 700km입니다. 그런 제2고속철까지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들은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효율은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상적인 상황만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복합도시로 여러 경제부처가 갔다고 할 때 대한민국의 중앙부처가 서울, 과천, 대전, 행복도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아는 이른바 정치적·행정적으로 발달된 나라의 수도에는 그런 중앙부처들이 2~3km 내에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미 마스크에서 많이 났었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특히 장차관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할 텐데 그 교통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천에 있는 행정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들이 서울에 대부분이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주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국방에 관해서도……

○**현기환 의원** 또 이전에 다른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런 비효율이 있다면 지금 다시 서울로 뭉쳐야 됩니까? 합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역대 과거 정부들은 크든 작든 정부 기능의 분산, 수도권 분산정책에 대해서 해 온 결과가 현재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MB 정부는 어떻게 역대 정부들이 조금씩 해 오던 것을 거꾸로 가려고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역대 정부가 경험한 것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어려움을 다시 경험하지 말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기환 의원** (웃음)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복도시가 비효율적이라면 157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그것은 뭐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하고 행정부처의 행복도시로의 이전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은 안하시는데, 공공기관도 정부와 협의해야 되고 국회에 와서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7개의 기관이, 그 임직원들이 정부에 와서 협의하고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효율이 따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비효율이 아니고 정부 부처가 가는 것은 비효율이다, 이중법적 잣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에는 경제학 용어를 빌리자면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행정부처 이전의 경우에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기환 의원** 글썽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마는 행복도시가 총리님께서 의도한 대로 수정되면 수정되자마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벌써 토지보상이 97% 정도 됐고 또 실제로 착공

도가 벌써 20%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똑같은 대답이신데요, 세종시도 이미 보상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뒤집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세종시는 지금 총 공사비로 따질 때 24%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대부분이 토지 보상이고 실제로 그 공사 착공한 것은 현재 제1단계 1구역 정도입니다. 그게 한 몇 % 안 됩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부에서 행복도시가 유명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의 사례로 브라질리아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브라질은 국토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위해서 브라질리아라는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브라질리아가 성공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전혀 성공사례로 보지 않습니다.

○**현기환 의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주말에는 텅텅 빈니다.

○**현기환 의원** 2005년, 제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브라질 대사관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리아는 성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1960년 4월 수도의 브라질리아 이전 이래 조성된 거주구역의 인구수용이 한계에 이르러서—당시는 이제 5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2005년 당시는 200만이 됐습니다. 현재는 260만입니다. 2005년 당시 200만이에요—차츰 주변 지역에 거주지가 조성되어 현재 타고아평가 등 19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위성도시가 형성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브라질리아,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위성도시 지역으로 돼 있고 제가 읽은 바로는 현재 주말에는 그 도시기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기환 의원** 11월 5일 날 모 언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리아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다. 행정부처의 이전만으로 명품도시가, 자족도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도 틀린 얘기네요?

○국무총리 정운찬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현기환 의원 그렇습니까?

11월 5일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어느 신문인가요?

○현기환 의원 그런 것까지 저한테 묻지 말고 찾아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예?  
(웃음소리)

○국무총리 정운찬 알겠습니다.

○현기환 의원 슈뢰더 총리 얘기를 인용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인용했습니다.

○현기환 의원 정부 부처 분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듣기에는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슈뢰더 전 총리가 말씀입니까?

○현기환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더 중요한 말씀이……

○현기환 의원 “행정 부처 이전에 따른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이 내려지는 곳으로 밀집한다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이동하는 현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국회에 오기 전에 직접 만나 봤습니다.

○현기환 의원 예.

정부 부처는 사람을 모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인구가 집중하는 이유는 다 알다시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을 다루는 중추기능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행정 부처를 몇 개 옮긴다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어느 지역으로 분산시킨다든지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균형발전이 굉장히 힘듭니다.

○현기환 의원 그거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역대 정부들이 고민한 내용

들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기환 의원 총리님, 그것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아이디어도 있고 기업도시 아이디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다른 지역의 발전의 동력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기환 의원 행정부처가 가면 비효율이고 공기업 157개가 가면 비효율이 아니고, 그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며……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것으로 과밀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행복도시에다가도 그 자족기능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현기환 의원 총리님, 행정 부처라는 중추기능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예상 못 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효율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전 국토의 비효율성을 막고 오히려 헌법 제123조에 명시돼 있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다소의 비효율을 감수하고자 했던 것이 행복도시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현기환 의원 동의하시면서 또 이렇게 다르게 하신단 말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 부처는 예정대로, 법대로 연기·공주에 옮기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백년대계의 양심에 부합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현기환 의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이제 한 40일 정도가 있으면 실시될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 지금은 우리가 모든 노조에 지역별·업종별·산별 또는 내셔널센터에 복수노조 허용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지 않은 곳이 사업장 단위입니다. 그렇지요? 내년 1월부터 허용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복수노조 말씀이십니까?

○현기환 의원 제 시간 까먹지 마시고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노조가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되면 이전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적어도 단기에는 노조 간에, 다른 노조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대표노조들이 기업의 경영진과 노사협상을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노동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경제학을 하시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심도 있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는 것,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허용돼서 생긴 노조들은 다 합법적 노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현기환 의원 합법적 노조들은 당연히 교섭권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왜 창구단일화를 합니까? 위헌의 소지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대표노조와 경영진과 교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기업하시는 분들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복수노조 허용됐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노·노 갈등,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 경쟁력 저하, 거의 69.8%, 70%를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은 13년 전부터 약속을 하고서 계속 유예해 온 것 같습니다.

○현기환 의원 역대 정부에서 13년간이나 유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지금까지는 서로 노조도 좋아하지 않고 기업도 좋아하지 않아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 사용자도 우려하고 노조도 반대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하지 말

아야 될 것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현실에 안 맞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자꾸 저의 제한된 지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OECD 회원 아닙니까? OECD 국가는 모두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OECD 말씀하시니까…… ILO 아시지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ILO에서 98년, 2002년 또 2004년 또 2009년 이렇게 네 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권고를 보내 왔지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잘 모릅니다.

○현기환 의원 모르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안 계시지만 그런데 또 우리 노동부장관은 각종 언론에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 합니다. 그것이 글로벌스탠더드다, 주지 않는 것이.

ITUC라고, 국제노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노조 간부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교섭결과로 지급되는 것이며 한국 정부의 노조법 제24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역시 또 제가 제한된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환 의원 외국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자꾸 시간 뺏으시네요.

미국도 뇌물을 금지하고 있지 노사관계 관련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임금 및 경비 지원을 허용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조합 활동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유급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대부분 나라에서 풀타임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고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노조가 회사에 기여하는 일을 할 때는 그렇지만 회사 발달에, 또는 회사 경영에,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오프(time off)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기환 의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명 이하의 기업과 300명 넘는 기업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저는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명 이하 또는 이상 간에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저는 일을 안 하고 노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기환 의원** 노동조합 간부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기업이 뽑았던 직원 중에서 법으로 보장된, 헌법에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전임자 임금 급여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현대차의 경우 전임자가 약 700명 가까이 됩니다. 한국노총,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전임자가 약 40명에 이릅니다. 전임자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침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은 다름 아닌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그동안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오늘 직접 하면서 먹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가 신뢰와 행복이 넘치고 통합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과 역사의 발전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현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승덕 의원 소개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열두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하 주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산 사하 을 조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온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문제로 들썩거렸습니다. 이어진 미국의 부동산 버블로 인해 국제 금융위기가 왔고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값 폭등 그리고 대학 등록금 폭등으로 인하여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보다도 2배나 많습니다.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88만 원대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여도 그 절반은 실업자 내지 비정규직에 종사하여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율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대학 등록금 실질적 1위, 근로자 노동시간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휘발유 소비자가격 1위 등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가운데 양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나라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의 무게가 우리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야 합니다. 여야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신종플루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 조경태 의원** 한번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가 봤습니다.
- 조경태 의원** 지금 정부에서 좀 뒤늦게 전염병인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심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격상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그것 느껴 봤습니까?
-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조경태 의원** ‘심각’으로 격상하고 나서의 정부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무총리 정운찬** 국민 건강에 관계된 것 같습니다. 어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것을 읽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조경태 의원** 예, 그러십시오.
- 국무총리 정운찬** 그동안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예방백신 조기 확보 및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투약과 치료 거점병원 지원 및 거점약국을 확대했으며, 불요불급한 문화체육 행사의 자체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음에 심각 단계 격상을 전후해서 사망자 발생 최소화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동네 일반 병·의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예방백신 접종을 10월 27일부터 실시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학교에서의 집단발생 차단을 위해 지역 단위 공동휴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특히 중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도별 치료 거점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병상을 확보해서 전문적 진료와 치료 등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경태 의원** 지금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타미플루를 48시간 이내에 투약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국무총리 정운찬** 예.
- 조경태 의원** 그런데 지금 신종플루 확진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 신종플루냐 아니냐가 확진되는 데 걸리는 시간,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 국무총리 정운찬** ……
- 조경태 의원** 제가 병원에 갔다 이 말이지요. 일반 국민 환자가 갔을 때 신종플루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하고 난 이후에 확진되는 데까

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국무총리 정운찬** 들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 조경태 의원** 총리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전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확진 기간을 모르신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결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무총리 정운찬** 현장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경태 의원** 지금 이틀에서 8일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니까 일주일가량 걸립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검사 나오면 뭐 합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검사장비가 아주 부족하다, 리얼타임 PCR이라는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런 기계가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야지 확진일수가 빨리 나오는데 이게 턱 없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지금 마치고 나면 꼭 하십시오.
-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경태 의원** 그리고 지금 공항터미널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철도터미널 쪽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손 세척제조차도 제대로 구비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단계 이후에 여행을 자제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발열이 많은 사람들이 버스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열차를 타더라도 전혀 그게 안 나와요, 단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그리고 검사를 할 때 검사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시지요?
- 국무총리 정운찬** 좀 비쌌니다.
- 조경태 의원** 12만 원 정도 됩니다. 의심환자들이 검사를 할 때마다 그 가족들이 다 해야 됩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3명 다 하게 되면 12만 원 × 3 하면 36만 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국무총리 정운찬** 예.
- 조경태 의원** 그런데 감기 증세가 있을 때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국무총리 정운찬** 예.
- 조경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된 가정에 대해서 신종플루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단 1명의 사망사고도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 국무위원들 간에도 거기에 관한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앞으로 예산을 대폭 투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 개인적으로는 투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우리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제가 방금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36조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제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안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를,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과학부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리 직속으로 기구를 즉각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공항이라든지 철도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그리고 영유아라든지 노약자분들을 우선 치료하도록 해 줘야 되고 저소득층·소외아동·워킹 맘·맞벌이 또는 혼자 일하러 다니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어요.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줘서 고맙습니다.

○조경태 의원 다음은 등록금에 대해서 제가 지

적하겠습니다.

등록금 부분은 아마 총장을 역임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이 도표를 보시면, 2009년도 OECD 교육지표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3분의 1의 나라가 등록금이 제로입니다. 여기는 자꾸만 이런 이야기 하면 유럽국가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유럽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우리나라 등록금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 처음 아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듣고 있었었습니다.

○조경태 의원 대학에 계실 때에 보니까, 총리께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장을 역임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렇지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004년도에 보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그 당시에 3.6%였는데 서울대 등록금 인상률을 18.3%나 올렸습니다, 총리님 총장 시절에.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계산방법에 따라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 이것 제가 다시 한번……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조경태 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등록금이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비쌉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 언론에 의하면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87%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립대, 우리나라로 치면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77%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학생들,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이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그 언론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87%, 77% 숫자는 아마도 우수 대학원의 경우일 것입니다. 학부 학생들한테 그렇게 88%…… 87, 70인가요? 80몇% 70몇% 장학금을 주기는……

○조경태 의원 확인을 하셔서 가지고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한번……

○조경태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우리나라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말이지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개선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는 대학이 대개 사립보다는 국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등록금도 싸고 또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는 국공립대학이 77%입니다, 평균.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이 1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그동안 고등 교육에 대해서 정부의 투자 의지가 아주 전무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등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지만, 높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조경태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쉽지만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조경태 의원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면……

○국무총리 정운찬 85%입니다.

○조경태 의원 안 되는 게요……

미국의 대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학생 숫자?

○국무총리 정운찬 ……

○조경태 의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대학의 국공립대학, 아까 말씀하신 주립대학의 비율이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정확한……

○조경태 의원 그러니까 자꾸 그 논리를 가지면 안 되지요.

67%입니다.

그래서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국민이 누구나가 다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헌법 잘 아시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미국에서의 대학 진학률이라는 것이 50%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8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러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보면 전국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 또는 기획실장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주 느슨한 기구……

○조경태 의원 느슨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모임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주 느슨한……

○조경태 의원 느슨한 모임이 아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느슨한 모임이 아니라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이 기획처장이 하는 역할이 뭐나 하면 등록금 책정이라든지 학교 예산편성의 주요 업무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이분들이 모여서 등록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한 것이 2007년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한 부분들이 메스컴에 나왔는데요 한번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1대 처장님께서서는 ‘등록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고 마지막에 감안했을 때 등록금 인상률을 7~8%가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어떤 의견을 냈는가 하면 ‘매년 1월 기획처

장 총회가 열리면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국무위원석에서 — 예.)

제가 이것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국무위원석에서 — 예.)

총리! 총리께서 이것 명백한, 저는 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대학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제가 대학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생처장들이 또는 기획처장들이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이런저런 교육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만나서 등록금에 관한 담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이 자기 대학의 정보를 또 남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총리께서는 보고 받으시고 철저히 담합이 밝혀지면 국고로 환수해야 될 돈이 한 16조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16조요?

○조경태 의원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상회하는 범위만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 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을 자라나는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저도 애들을 사립대학에 보내고 그때 등록금이 비쌌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을 경영하고 보니까 지금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자면 교육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과 부문에서는 거대 학문이라고 그래서 연구비가 정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연구비가 충분치 않고서는 세계 대학들과 경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 그러니까 총리님, 부족한 재정은 국가가 부담해야지 왜 학생들한테 부담시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제 말씀 좀……

○조경태 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그것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도 많고 대학생도 많고 하지 않습니다?

○조경태 의원 또한 지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3조가 넘지요, 합계가? 파악해 보십시오. 등록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해 가지고 손실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받아서 엉뚱한 데다 투자를 합니까? 학생들한테 되돌려 줘야지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뭐 말씀의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 연구를 좀……

○국무총리 정운찬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경영을 4년 동안 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 공정거래위에서 담합 밝혀지면 꼭 16조에 달하는 추가분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하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과 같아야 된다는 대전제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겠다고, 특히 그중에서 대안을 하나 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경태 의원 고향이 충청도이시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 서울에서 태어나셨으면 혹시 총리가 안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총리가 되었습니까?

○조경태 의원 충청도가 물이 좋고 산도 좋고 인재가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충절의 도시 아닙니까? 제가 나쁜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아주 훌륭한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이

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조경태 의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도권 인구 비율이 49.5%입니다. 반올림하면 50%에 달합니다. 전 세계 선진 국가 가운데서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화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의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예를 들면 4%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만 들어도 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은 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동의합니다.

○조경태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지방에 조금 예산 내려 주고 그것 생색내기하면 안 됩니다. 세종시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또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선진 국가 가 보십시오. 어느 도시에…… 서울만, 수도권 빼놓아 크게 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 도시들도 서울 수준의 대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호남권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때 그런 공약도 내걸었습니다마는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그것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광주가 그 특성상 문화도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문화수도 말이지요, 도시는 다 되어 있으니까. 문화수도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광주가 문화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광주에 투입되는 예산이 2023년까지 국비가 2조 한 7000억 ~8000억밖에 안 됩니다. 2조 원 투입해 가지고 문화수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 광주를 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보다 10배 수준으로, 약 30조를 2023년까지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의지를 보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리고 영남권 지역은, 부산이 보면 해양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국무위원석에서 — 예.)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국무위원석에서 — 예.)

그렇지요? 그래서 해양수도라고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부산을 정말 해양수도다운 국제 해양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지자체니까 지방정부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자족·자립의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 없는 재원이라도 만들어야지요. 가능하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런 예산들을 또는 4대강이나 이런 데 집중돼 있는 예산들을 지방 균형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입해서라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뉴욕과 같은 또는 호주의 시드니와 같은 국제 해양도시로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조경태 의원 다음은 4대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도 혹시 괜찮으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국토부장관께서 대답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한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신 여기 이곳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지 않겠습니까?

○조경태 의원 총리께서 차질 없이 추진하시겠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리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부족한 것은 또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저는 토목공학박사입니다. 제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입체적인 지질조사나 지반조사를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조경태 의원 제가 오늘도 들었습니다. 4대강 추진단의 서기관이라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지반조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 못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직 못 받았습시다.

○조경태 의원 국토해양부장관님, 지반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국무위원석에서 —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심대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경태 의원 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토목공학의 ABCD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4대강 유역에 일반 모래라든지 흙이 아닌 암반층이 나왔을 때 그 공사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짐작이 갑니다.

○조경태 의원 그런데 그런 사전 예비조사도 하지 않고 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해됩니다.

○조경태 의원 그리고 지반조사 하지 않고 지금 공사 착공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 책임자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동의합니다.

○조경태 의원 꼭 4대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원위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조경태 의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희상 조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학용 의원 소개로 경기 안성 지역구민 백스무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의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安), 매력 넘치는 마법의 성(城),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김학용 의원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데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김학용 의원 그러나 우리나라의 2008년 출산율을 보면 1.19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까마는 이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13조 7781억 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학용 의원** 국민들은 저출산 대책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 영유아에 대한 양육 지원 대책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 대책의 성공사례로 뽑히는 프랑스의 예를 보면 20살이 될 때까지 월 120유로, 약 20만원 이상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족수당은 물론 자녀가 셋 있는 가정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우선분양,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과 같은 그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인 인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장잠재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은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들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를 위해서 쓰이는 그런 도로에 빔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저출산 대책에 우리가 빔을 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서 저출산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동감입니다.

○**김학용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저출산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와 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9개나 되는 부처에서 100개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며칠 동안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 사업들을 통합하고 또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 타워에서 경제성장률과 같이 경제지표처럼 출산율도 수치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맞습니다. 지금 워낙 이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직속기구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고 특히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수치를 이제는 관리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광우병 사태랑 멜라민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것은 아주 큰 관심이 됐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하나를 봤더니 맛이나 품질보다도 식품안전을 최우선해서 식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36.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과연 우리의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학용 의원** 맞습니다.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그것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복잡하고 후진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몇 개 있고 혹시 법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도 6개, 7개 부처에서 한 30개 정도의 법률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시다만, 깨와 참기름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내드렸습시다만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현재의 식품관리행정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할 경우에는 제2, 제3의 식품사고가 생겨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진적인 식품관리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4년의 불량만두, 2005년의 기생충알 김치, 2008년 멜라민 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지금 정부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사실 제가 앞으로 위원장 역할을 해야 될 식품안전정책위원회까지도 있는데 부처 간 식품안전 관리에 총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학용 의원** 제대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처 간의 이기주의, 힘겨루기,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2008년도에 출범을 했지만 제가 보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 회의를 네 번 했는데 1년 동안 두 차례는 서면으로 하고 한 차례에 30분씩 해서 1시간 한 것이 고작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 좀 나서서……

○**국무총리 정운찬** 30분은 아니고 한 두어 시간 한 것 같습니다.

○**김학용 의원** 보내 주신 자료에 30분으로 돼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다음은 천일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자원인면서 정부의 무관심으로 홀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천일염입니다. 최근 한식 세계화가 아주 화두인데 한식의 근간이 뭐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김치 된장 간장 이런 것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맞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젓갈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장류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학용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은 백화점에서 1.5kg에 약 8만 원에 판매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천일염은 1.5kg에 156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려 50배나 가격 차이가 납

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과 우리나라 천일염을 성분 분석해 봤더니 칼슘은 거의 비슷한데 칼륨과 마그네슘은 우리나라 천일염이 오히려 3배 이상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천일염은 나라를 잘못 만나서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고 그보다 훨씬 못한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은 나라를 잘 만나서 명품 대접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 시정돼야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말 저희가 좋은 물건 또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학용 의원** 다이아몬드도 땅속에 있는 것을 캐내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래야 비로소 다이아몬드로서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염전에서 지금 석면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크게 났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까지 어엿이 식품으로 쓰이는 소금을 광물로 분류해 가지고 나라에서 못 본 체 내버려 두 가지고서 몇십 년 전 그런 시설로 우리나라 염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은 시설을 완전히 현대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염업조합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오늘날의 게랑드 소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것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갯벌 천일염이 세계 5개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 86%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육성, 발전시키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한식의 세계화는 그야말로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본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신이 우리나라에 내린 선물 천일염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 1등 품목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새정부 출범과 함께 천일염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작년에 분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그래서 하는 얘가지요. 이제서야 그렇게 분류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김학용 의원**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김학용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택지개발사업 이것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뉴타운 한다고 해 봤더니 보상도 2~3년 동안 지연이 되고 또 이제 와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반으로 축소하자……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르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공공사업을 위해서 땅을 내놓겠습니까? 이런 사항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이것 반드시 지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안성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수요 부족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토지공의 자금 부족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관심 가진 그 안성 문제는 제가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서운-안성간 도로,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분당에서 천안까지 이어지는 국지도 중에서 유독 안성 14.7km가 안 돼 가지고 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것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에서 도대체 14.7km 때문에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것 정말 첩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비효율의 극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관님이랑 노력을 해 가지고 균특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학용 의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관이나 기재부장관께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지 언제까지 안성 도로는 가다가 끊겨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방치할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상당 부분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기재부장관님,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정책의 근간을 위협하고 수도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문제를 같이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 예정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잘 압니다.

○**김학용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보면, 저 화면에 나오니다마는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서 반드시 제척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민들은 4만 6000명의 반대서명, 청와대와 해당 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이전 반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대표자들을 만나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만나 뵈었습니다.

○**김학용 의원**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캠프 콜번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토해양부 실무자들로 부터도 여러 차례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남 지역으로 중앙대가 오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냥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간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지자체 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문희상 부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학용 의원** 또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  
다. 1977년 중앙대 안성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서 우리 지역의 선배들이 300명의 투자유치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후손들을 위해서 땅 좀 내놔  
라 해 가지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다 발  
벗고 나서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야는  
150원에서 한 200원 정도, 그리고 논은 한 3000  
~4000원 정도에 우리가 다 학교를 위해서 매매  
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된 안성캠퍼스  
주변 땅값이 지금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주변 땅값은 200만 원을 호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성시민의 혼이 서려  
있는 안성캠퍼스를 팔아 그 비용으로 하남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비유하자면 백년해로하기로 약속하고서 30년 동  
안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나타났다고 새장가 가려고 하는 것이나 뭐가 다  
르겠습니까? 장관님, 제 말이 맞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압니다.

○**김학용 의원** 우리나라의 카이스트·포항공대,  
영국의 케임브리지·옥스퍼드 이게 학교 위치가  
좋아서 지금 명문대학이 된 것입니까? 문제는 그  
대학에서 그 대학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와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행법상 불가능한 하남 이전에  
대해서, 자꾸 불가능한 것을 이전한다고 계속 흘  
려 가지고 지금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  
다. 더 이상 이런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중대 이  
전 불가 방침을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부에서 확실하게 천명해서 이러한 갈등 소지를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지금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침을 바꾸기 위해서 치열한  
로비가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것 바꾼다면 지금  
여기 동료 의원들도 다 계시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로비 때문에 바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물론 잘 해 주

시리라고 믿습시다마는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러  
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또 이것이 안성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하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서울로 올라올 것이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것은 국가적으  
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됩니다.

중대도 발전하고 안성·하남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발 딛을 틈 없  
이 협소한 중앙대 흑석동 캠퍼스 일부를 하남으  
로 옮기든지 아니면 지금 의정부로 건국대학교가  
가고, 과주로 이화여대가 가는 것처럼 원하는 서  
울에 있는 다른 대학을 옮기면 됩니다.

이번 중대 이전 논란을 계기로 우리 안성시민  
들도 중앙대가 얼마나 지역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중앙대를 세계적인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  
리에서 다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국가 균  
형발전을 위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중대 안성 캠퍼스의  
하남 이전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도의적으로  
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 한번 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가 봤습니다.

○**김학용 의원** 안성이 수도권이라는 울타리 안  
에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도권의 도움은 못 보  
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서  
충청도만 넘어가면 모든 공장이 다 되는데 우리  
안성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참고 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  
간 살아온 우리 안성시민을 위해서 도움은 못 줄  
망정 있는 대학을 이렇게 빼 가는 이런 문제, 총  
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감사합니다.

○김학용 의원 장관님 성함처럼 우리 농업이 태평하고 농촌진흥청장님의 성함 김재수처럼 우리 농민들이 재수가 좋은 1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대풍입니다만 농민들은 즐겁지 못합니다. 쌀 문제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는 점인데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생산량이 많습니다. 아무튼 평년작보다 더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오든지 정부가 매입해서 비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축하는 비축 물량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방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는 특별히 280만t이 넘는 물량을 매입해서 시장에서 수확기 물량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미에 대해서 특별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정부에서 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전국에서 소비되는 자장면 밀가루의 30%만 쌀로 대체하면 연간 10만t이 넘는 쌀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8월부터 군과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밀가루 가공품을 쌀 가공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협의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쌀 라면 또 쌀 국수 그리고 생일케이크라든가 건빵을 쌀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기재부장관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장병들이 먹는 떡국이라든가 각종 가공품이 100% 다 수입 쌀입니다. 이것 국산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외국 쌀 먹으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족한 예산은 기재부장관님께서 뒷받침을 해 주셔서 반드시 국산 쌀로 쌀 가공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학용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이윤성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88년 존경하는 이해구 의원의 비서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20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18대 국회의원으로 보람과 영광보다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1995년 처음 공직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건 슬로건이 ‘휴머니즘이 살아 있는 정치’였습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회에서 느낀 정치는 너무나 적대적이었습니다. 내 주장은 옳고 남의 주장은 그르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 가치 이상으로 인간을 중시하는 가치와 윤리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은과 나눔과 배려정신 이것이야말로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18대 국회가 분열과 갈등의 장이 아닌 말은 바 위치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국회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 쌀이 좋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김학용 의원 단하에서 — 제가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졌다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대다수의 서민들은 일자리·주거·의료·교육 등 생활의 기초적인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확대 즉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이 양극화의 심화과정이었다면 이명박 정부 2년은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회 구석구석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2등국민, 2등급신랑, 2등급신부, 3류학교, 3류인생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심각하게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조문이나 교과서의 평등이란 말은 현실에서 공허한 냉소의 대상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선 현안문제 몇 가지를 해당 장관께 질문을 드리고 사회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일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일이 공휴일인 경우 원금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적용한 사례가 약 6000여 건이 있었고 약 1억 245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조승수 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대해 시정조치를 촉구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3개 은행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 13개 은행 TF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은행은 완료를 했고요.

○조승수 의원 제일은행은 빼고 12개 은행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보험이나 증권 등 제2금융권에도 사실…… 13개 은행이, 시중 17개 중에서 이렇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제2금융권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있는데 제2금융권에 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감원에 은행 말고도 2금융권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부당하게 대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조승수 의원 산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5km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예산상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률이 제정된 지가 20년이 지났고 또 여러 가지 특정지역은 그 지원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쌓여있는 등 사실은 실효성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최근 정부에서도 신규 원전 발주와 관련하여 이 법률의 전반적인 개혁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우리가 모든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5km가 적정하나, 10km가 적정하나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오랫동안 5km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또…… 10km로 하면 또 10km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또 그동안 바뀐 여건 이런 것에 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뒤에 교과부장관이 앉아 계십니까라는 현행 원자력법에 의해서 방사선 관리구역은 10km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 10km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라는 그 거리에 따라서 최소한 지금 달라진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는 충분히 범위를 확대하는 것까지 이번 검토 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저는 하여튼 일률적으로 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십시오.

자료화면 가변 좀 띄워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는 장관님께 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원일 의원과의 질문 과정에서 부자 감세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2008년에 세제 개편안을 디자인할 때 정부에서는 약 3분의 2정도의 세제 개편 효과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승수 의원** 가변 자료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2008년, 2009년 2개 연도 감세안이 실제로 상위 10%와 하위 10%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위 10%는 4000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10%는 100만 3000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경우 2%씩 내리면 내리는 비율로 보면 예를 들면 8%에서 6%로 2% 내리는 것하고, 35%에서 33%로 2% 내리는 것은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조금 내려도 감세 세수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조승수 의원** 제가 지금 총액을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구당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승수 의원** 가구당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니, 가구당이라도 그렇지요. 우리나라 가구라는 게 대부분 1인 의존 저거니까 그런 감세를 하게 되면 원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감세 숫자 자체는 많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승수 의원** 아니, 지금 자꾸 총액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위 10%와 상위 10%의 가구당 감세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4000원과 100만 3000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위 소득계층에 감세를 해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는 모수가 작기 때문에 감세 숫자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승수 의원** 나번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저는 장관님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데요, 지금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평균소득 150% 기준 4800만 원, 저건 정부가

지금 고소득 기준으로 잡고 있는 기준 금액입니다. 그 고소득층에 감세 효과가 76.4%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부정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 자료를 주시면 저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저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와, 제 보좌관 중에는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 공인회계사가 다시 통계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자료를 기본적으로 기초로 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부자 감세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그 부자는 한국 부자가 아니고 어디 미국 부자입니까, 일본 부자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조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저 자료를 미리 저희한테 줘서 한번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저 자료를 보고, 저 자료의 근거나 백그라운드 좀 보고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증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도 상당히 어떻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승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자료가 객관적인 통계와 또 객관적인 방식에 의한 재구성이라고 한다면 부자 감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그 자료 검토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조세연구원을 비롯해서 우리 세제실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허망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고, 한국의 재정이 나름대로 왜 건전하냐 하는 것은 재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IMF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의 건전성을 얘기하고 있고, 재정의 건전성을 배우려면 한국 정부에 가서 배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개발연대 30~40년 동안에 우리 아무런

자본 축적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만큼 경제 개발을 이끌어 오면서 재정이 이 정도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민들의 합일된 노력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이 분야에, 재정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것의 자료를 보고 우리 자료가 잘못됐다 하면 그때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제가 재정 전반에 관해서 여쭙지 않았고 세제에 관련한,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아마 장관님과 2라운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조승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대정부질문에 굉장히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조승수 의원**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한 석뿐인 진보신당의 국회의원입니다마는, 또 한 석이라서 총리께서는 총리 취임 이후에 각 정당을 방문하시면서 방문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지금, 진보신당 국회의원 전원이 총리 앞에 서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총리께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승수 의원** 영어에서는 이코노미라고 얘기하지만 동양에서는 경세제민을 줄여서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이 경세제민의 뜻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승수 의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상대적 빈곤의 심화, 즉 양극화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견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양극화도 중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양대 과제가 지속적 성장과 양극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승수 의원** 반만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림 3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는 제가 도표를 드렸습니다. 바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잠깐만……

○**조승수 의원** 노동 양극화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림 3입니까, 번호가?

○**조승수 의원** 예, 그림 3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

○**국무총리 정운찬**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림에 번호가 안 적혀 있네요.

○**조승수 의원**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목이 뭐니까?

○**조승수 의원**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 1번으로 좀 띄워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여기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자리의 절반이 넘게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또 그들이 받는 임금이 이미 정규직의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많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저는 이 양극화의 핵심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 고용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역시 노동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같은 질의 노동, 같은 양의 일을 했다면 같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수 의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실에서 또 우리 제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만약 앞으로 비정규직 관련한 제도의 개정 과정에서, 혹은 개혁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분을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실현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어떤 직장에서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의 비율을 상한, 하한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상한, 정규직의 하한이겠지요. 그것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조승수 의원**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고위직으로서는 저는 가장 전향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향적인 방향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다음, 노동 기본권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서울대 재직 시절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게 제가 민교……

○**조승수 의원** 소속이야 계셨지요? 활동의 여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회원이었었습니다만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아주 흔쾌하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조승수 의원** 혹시 총리께서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대중조직에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대중조직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제가 대답에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만 또 모르지요.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조승수 의원** 기억으로는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승수 의원** 그러면 혹시 시국선언 하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시국선언은 여러 번 했습니다.

○**조승수 의원** 지금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도 2차 시국선언 조사를 검찰이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교수와 교사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교수는, 다 같이 교육공무원이지만 정치적 활동이 허용되고 교사는 정치적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법정신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교수들은 가르치는 대상들이 20 또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이 다 들고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교사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연령이 좀 낮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서는 교사들이 교수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승수 의원** 시국선언을 할 때는 그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디인가, 혹은 고등학교인가 대학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은 비록 교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똑같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는 시국선언을 하면 안 되고 누구는 해도 되는, 이것은 법제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부정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법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승수 의원** 다음 그림 4번, 5번 차례로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총액이 2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31만 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지역과 이른바 지방의 읍·면지역의 사교육비 격차가 2.4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으면 사교육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충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승수 의원** 말하자면 부모의 재산이나 학력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가 나타나고 그 격차가 다시 대를 이어 가난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 교육제도의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교육 문제가 사실은 교육 자체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심각성 정도와 또 해법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려워서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간적 도리를 못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집안이 어려워서 교육을 못 받는다면, 만약에 어렵지 않았더라면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인적자원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해서 한국경제의 인적자원 형성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고 또한 장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림 6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이른바 뉴타운 등으로 해서 새로 짓는 집의 약 99%가 이른바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여 주고 있듯이 자기 집이 없는 국민이 41%입니다. 지금 이 뉴타운을 비롯해서 공급 방식으로는 저는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동감입니다. 뉴타운을 만들 대상, 지역에 걸맞은 뉴타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중형 아파트 자꾸 지어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사정에 맞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최선의 노력을 하면 들어갈 수, 그 지역에 거주하던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할당을 70% 한다든지 80% 한다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수 의원** 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재개발이 되고 땅 가진 사람과 건설사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수도권에서 막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극단으로 터져 나왔던 사건이 용산참사 사건입니다. 용산사건 이제 해결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총리 되자마자 일단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그 사건을 미국에서 봤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애통했었고 또 와서 보니 지금으로 기준을 하면 300일 동안 장례도 못 치른 것은 정말 그냥 보기가 딱 해서 위로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진하게 가서 의지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역시 현실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세입자와 또 지주들 간의, 조합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유족이 되고 아직도 장사 치르지 못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야말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위로도 해 드리고 또 장례도 치르게 하고 또 저한테 호소하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의 군대 문제, 또 어떤 분은 아들이 지금 수배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현재는 그 후로 총리실에 전임자들을 정해서 그 전임자가 무슨 다른 단체하고 접촉하지 말고 유족들하고 접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화도 몇 번 했고 또 실제로 만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오늘도 해결하려고 어제도 해결하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여러 가지 근인과 원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먼저 장례부터 치르고 나서 그다음 협상을 하든지 또 대화를 하든지 했으면 하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나 비판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심에서 판결이 났으니 그걸 다가 싫으면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이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단 장례를 치르고 또 이런저런 모습에 위로도 받고 그다음 또 대화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대단히 아쉬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용산 유가족 중의 한 분은 그 남편은 이른바 불에 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불태웠다고 해서 이번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산참사가 가지는 우리 사회의 상징성이나 그 깊이나 그리고 주거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정책들의 모순들이 집약된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리, 이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총리께서 가진 모든 식견

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다음 그림 7번 올려 주십시오. 의료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하위층의 가계지출 대비 의료비 비중이 약 7%입니다. 그에 비해서 최상위층은 2.17%로 약 3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20%의 병원 진료비가 상위 20%에 견주어서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소득 50만 원 이하인 가구는 250만 원 이상에 비해 사망위험이 2.37배가 높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조승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의료민영화를 위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도로 의료를 영리화해서, 의료산업을 민영화해서 영리화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 정말이지 이 문제 다시 한번 근본에서부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공립병원을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해 준다든지 또 이른바 의료보험에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동의합니다만 지금 세계가 정말로 모든 방면에서 무한경쟁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료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하자면 소위 BT도 발전해야 되고 또 임상 부분에서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국 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소득양극화도 중요하지만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려면 외국과 경쟁해야 되고 외국과 경쟁하려고 하면 BT 분야에서 또 의료 임상분야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서 너무 문만 닫지 말고 조금 더 문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관련해서 보육 문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 8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유기체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유기체는 자연 섭리에 따라서 자신의 종족이 위험해질 때 더 이상 종족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 종으로 비춰 보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살 만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출산해서 아이를 제대로 맡길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다 따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키우기 힘들니 안 낳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단순히 키우기 힘든 것이 아니고 지금 공립보육시설은 조금 전 표에서 보셨듯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떨어지고 있고 대신 민간보육시설만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립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지 않을 정책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공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공립보육시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그래야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질 높고 가격이 저렴한,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래서 출산을 하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총리, 세종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 세종시의 논란이 사실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당이 어느 정당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세종시의 본질은 저는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최초의 취지가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도시를 잘 만드는 게 지방 분권이나 균형 개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승수 의원** 지역을 식민지화해서 이른바 수도권이 살찌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과 모든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병이 들면 신도시 만들어서 또 팽창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원래의 개념에서 세종시 문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총리, 삼성 X파일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삼성 X파일이요? 저는 그저 잡지에서 읽은 수준밖에, 잡지 수준밖에 모릅니다. 그 정치적 사건 말씀 맞으시지요?

○**조승수 의원** 예, 이른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그룹과 그리고 검찰의, 이른바 ‘떡찰’로 불리는 검찰의 검경 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문제가 진행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MBC 기자 한 사람과 그리고 저희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12월 4일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가 적절하게 비유했듯이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는데 그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을 고성방가죄로 잡아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조승수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총리께 진정 어린 고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세 가지의 공적과 하나의 집단 질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근대성도 갖추지 못한 전 근대적인 기업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념 노선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정당 구조, 그리고 세 번째는 관료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전 기재부장관이 부자 감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대표적인 관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일본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의미 있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작업이 바로 관료 개혁이었습니다.

저는 이른바 공무원으로 불리는 관료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교묘히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러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집단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 앞으로 일을 하심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 관료들과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료를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료가 잡아 놓은 일정과 계획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증현 장관은 아주 훌륭한 관료 중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마무리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고 4대강 사업의 대규모 토목 공사로 건설회사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의 편에 서서 서민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야만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거 양극화를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용산 참사 등 서민들을 몰아내는 악질적인 재개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유층의 전유물인 특목고 늘이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안타까운 뉴스 앞에서도 의료 민영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모습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때문에 울고, 중소 상인은 대형 마트와 SSM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중소 상인의 매출은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차별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는 중소기업·중소 상인이 좀비처럼 변하는 ‘좀비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의 산업으로서의 농정을 펼친 결과 폭락한 쌀값에서 보여 주듯 농업·농촌은 피폐해지고 농민들의 가슴은 논바닥 갈라지듯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단한 우리 서민의 삶이 이러한데도 정부나 국회,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희망은커녕 실망과 냉소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야당의 모습도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진 자와 기득권을 위한 독주와 횡포로 전횡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기에 패기도 열정도 부족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세제민의 경제는 경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이며 우리 정치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야만의 정글 사회로 고착되는가 아니면 초록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만의 정치에 맞서 반드시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윤성** 조승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 의원 잠깐 기다리시지요.

지금 막 질의 순서를 기다리는 우리 유일호 의원님 소개로 서울 송파 을에서 지역구민 스무 분이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비교될까 봐 나중에 알려 드리려 했는데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의원님 소개로, 다음다음입니다, 서울 관악 을의 지역구민 140명이 오셨습니다.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국회가 가까워서 그런 것 같고 송파는 조금 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一鎬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 을 출신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를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정부의 신뢰와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드렸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삼폐인을 터트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낙관하기는 이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과는 달리 서민들은 아직도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 온 국민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하면서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제 더블딥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일반적인 세계 경제에 대한 평가는 최근에 주요 국가의 분기 성장률이 소위 미국까지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실질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들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저희도 그쪽 편에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신중하게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올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3/4분기 2.9% 성장을 보면 금년 전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이 속도가 우리가 지금 자랑스러운 그야말로 빠른 속도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빠르다거나 또 우리에게 이른바 더블딥의 그런 위험성이 또 도사리고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이 국내적으로 아무리 경기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의원님 잘 아

시다시피 우리의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특히 국제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柳一鎬 議員** 굉장히 신중한 낙관론을 펴고 계신데요. 우선 앞으로 이른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대외변수가 환율이라든가 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우리 경제의 외부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것은 바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망은 아마 환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유가라든가 대외환경의 이런 변수들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석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동향에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자재 비축에 나름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본격적인 소위 디맨드(demand)가,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계 물가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柳一鎬 議員** 마지막으로 거시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문제입니다. 실업률은 아주 양호하고 우리가 저실업률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고용률은 심지어 OECD 평균보다도 못 미친다, 지금 우리 고용률이 약 63.8%로 추정이 됩니다. OECD 평균 66.5%에 못 미친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시피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한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또 뭐가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업률은 낮는데 고용률도 계속 낮은 제일 큰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가사를 돌보는 주부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실업률은 저희들이 한

3.5% 내외를 들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률은 거진 8%, 요즘 9, 10월 들어서 8% 이하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청년 실업률은 계속 8% 이상이 지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고 거리를 헤맨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나라의 장래를 비롯해서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청년인턴제를 대폭 실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공공부분에서 일단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서비스업에서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一鎬 議員**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청년인턴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한시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이 민간부분의 활력이 살아나서 정말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쏟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동시장의 경직화, 노동법의 경직성 이런 것이 또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 규제를 거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현재 노동법제나 관행이 기업의 신규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지 않느냐, 현재의 노동법제와 관행이 정규직 보호 위주에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조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금 다각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고용의 보장 이러한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소위 사회안전망의 확충 이런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선순위를 두고 많이 배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특별히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야말로 감세정책과 재정적자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쯤 되면 사실 우리가 부자 감세라는 표현은 좀 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부자 감세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우선 장관님께서 부자 감세라는 말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장관께 대정부질문을 드릴 때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감세가 있었고 그때는 부자 감세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柳一鎬 議員**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나성린 의원께서 계산을 하나 해서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절대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의 감세가 당연히 절대액으로 많지만, 여러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세율로 보면 저소득층이 훨씬 높다 하는 그 계산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헛된 계산이 아니고요.

다시 소개를 하자면, 물론 요 계층만 얘기하는 것은 예에 불과합니다. 1000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지신 분은 평균 9.3만 원, 1인당 9.3만 원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에 8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는 평균 437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절대액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반면에 그 율로 보면 1000만 원 이하는 52.4%고 8000만 원 이상은 8.3%입니다. 자기가 내는 것의 8.3%가 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다시 인용하는 것은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소득세의 감세라는 것이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아까 그러지 않아도 그 논의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유 의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면 지난 2002년에 시행됐던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율을 4단계, 10% 20% 30% 40%로 있던 것을 전부 똑같이 10%씩 감했습니다. 10%씩 경감을 해서 10%는 9%로, 20%는 18%로, 30%는 27%로, 40%는 36%로 해서 똑같이 10%씩 감했습니다. 그러면 10%가 제일 낮은 계층인데, 제일 높은 계층인 40%하고 비교했으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2008년 소득세법 개정된 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8%부터 35%까지 있는 소득세 세율을 2%씩 낮췄습니다. 8%를 6%로 하고요, 35%를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33%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8%가 제일 낮은 계층인데 8%를 6%로 했다는 것은 2%를 감해 주면, 8%에서 2% 감해 주면 경감률이 얼마나 하면 25%까지 옵니다. 25% 경감시켜 주는 겁니다. 상위계층인 35%를 2% 감해 주면 이것은 몇% 감해 주냐 하면 퍼센티지를 보면 5.7%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자 감세라고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5.7%를 감해도 절대규모는, 경감규모는, 감세액은 25% 경감된 하위계층보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 자체를 많이 내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자 감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저도 장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인데요.

부자 감세라는 표현 자체는 감세의 효과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다분히 편 가르기 식의 그와 같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의 경제위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이 돼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 재정지출에 의한 추경 편성을 하고 그래서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세가, 지금 어차피 감세라는

것 그 자체는 재정적자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감세논쟁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동의합니다.

감세에 따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싸고 상당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가능하면 영세·서민층에 좀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柳一鎬 議員 감세의 세수, 그야말로 감세의 총세수 감소 효과에 대해서 잠깐 과거의 시점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지요. 거기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2002년도부터 소득세율 인하가 시도가 되었고요, 또 2005년부터 1%포인트 인하가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세가 직접적으로 엄청난 그야말로 세수감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때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 또 2008년도 보시면 많이 줄었지요, 반면에? 2008년도에 감세 효과가 약간 있습니다.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당겨서 감세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는 것은 다분히 2007년도에 어찌 보면 비정상적으로 소득세수가 는 데 기 인합니다.

왜 저렇게 늘었을까, 저것은 그때 양도소득세 수가 저 차이만큼, 3.3조 이상으로 비상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실거레가 제도 도입 등으로 해서 그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단순히 감세를 하면,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오히려 증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은 그 자체로 세 감소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 세수를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이 합쳐져서 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조금 줄어들지요? 왜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안 주냐, 이것은 아마 법인세가 1년 반 정도의 락(lag)을 두고, 시차를 두고 세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면 세수의 감소 효과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를 보십시오.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후에 기업의 이익을 늘려서 법인세수를 도로 늘리겠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을 낮추자는 것은 다 저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 활력을 높이자는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지금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감세의 유보라든가 혹은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좀 올린다는가 이런 것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그것을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참 불행히도 국가채무가 아주 급격히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사상 초유의 채무부담을 다음 정권에 넘겨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재정정책의 근본을 바꾸어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가채무를 걱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여도 야도 행정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다음 정부에게 엄청난 채무 증가를 남겨준 정부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과거지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여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연평균 채무증가율은 4.0%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절대액수로 175조 8000억 원이 되지만 이것은 경상가격입니다, 실질가격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

고 우리 이명박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4% 증가 수준,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이 수준을 우리가, 이 정부가 꼭 지키는 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 뜻을 전달하고자 이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장관님, 이 약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세연구원장을 지내시고 이 부분에 제일 정통하신 전문가이신 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별히 유의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자존심하고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사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우리 장관님께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남겨 주는 정권이 이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역시 제가 여러 번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나왔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정부 부문, 공무원 수라든가 정부 부문을 축소하고 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좀 부진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가 도로 많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부는 지금 공기업 선진화를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큰 과제의 하나로, 어떤 정부에서도 보지 못할 정도의 강도 높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문제는 각 부처별로 훌

어져 있는 공통된 사안을 뽑아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것을 중심으로 지금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柳一鎬 議員** 그렇더라도 국민들 보기에 또 다시 위원회 공화국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마지막으로 복지 지출 관련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대강 사업 같은 것 때문에 복지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아도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4대강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SOC 예산 규모를 2009년도 당시 분예산보다 거진 1조 가까이 내년엔 더 늘렸고요. 복지 지출도 재정 지출의 일반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8.7%까지 증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혹시 그런 오해를 살까 봐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때 이 부분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柳一鎬 議員** 다음으로 기왕 4대강 사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소위 턴키방식 입찰방법…… 이 턴키방식 입찰방법은 사실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턴키방식을 사용하게 된 데는 다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턴키방식은 굉장히 담합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난번까지 13건의 고발 중에 12건

이 턴키방식에 의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사업이 턴키방식으로 진행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柳一鎬 議員 그러면 이런 담합의 문제가, 이미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걱정이 됩니다. 담합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첫째, 이 방식에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담합의 문제가 더 큰가 하는 질문이 하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이 4대강 사업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수의 대규모 건설사업자들이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도 주시고 또 지적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담합과 관련된 듯한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턴키베이스 사업이라는 것이 기술력도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규모의 경제도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설계비 부담 능력도 있어서 근본적으로 보면 입찰이 가능한 사업자의 수가 상당히 제한되는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입찰한 가액도 상당히 유사한 이런 면모를 보여 줘서 저희들이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잡음도 있는데, 입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된다 그러면 이 4대강 사업의 장애요인도 되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초에 4개 팀을 파견을 해서 이틀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또 국감 현장에서도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분석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또 더 검토해 봐야 될 이런 사안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지금 저희가 이 입찰 담합이라든가 가격 담합에 관해서는,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운용되는 체제가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손댄다는 것은 이 체제에 대해서 근본

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보면 관련 매출액의 7%에서 10%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상당히 아주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구속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거를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등의……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자연형을 부과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업문화도 그렇고 경영의 행태도 그렇고 미국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런 개인에 대한 자연형 부분, 고발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동향이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자연형을 부과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경영법의 집행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영·미 이쪽은 지금 더욱더 강화한다는 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柳一鎬 議員 면허를 정지를 오래 시킨다든가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그런 부분은 주무 관청에서 관할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구제수단과 관련해서, 예컨대 기업 결합과 관련해서 보면 기업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담합의 경우에는 그런 구제수단을 구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柳一鎬 議員 이걸 존경하는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님이 면허를 취소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柳一鎬 議員 지식경제부장관님!

질문을 하시다가 질의에 대답하시는 자리로 가니까 더 힘드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웃음)

○**柳一鎬 議員**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이게 하루 이들의 현안이 아닌데 SSM의 진출, 이것 때문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 유통업체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안들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방안을 잡아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SSM의 출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골목 상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을 개정을 해서 재래시장, 흔히 전통시장으로 불리는 이런 데를 전통상업구역 이렇게 해서 그 일정 바운더리까지는 허가제를 도입을 해서 출점 속도를 규제를 하고 또 그 이외의 지역에도 기본적으로 등록제를 하되 좀 강화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그런 등록제를 시행을 해서 일단 출점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책을 펴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대책도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대체로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현대화나 또 유통업체에 대한 물류센터 등 양적 지원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이 미흡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대책을 아울러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는 저희가 중소 유통업체 한 1만 개 정도를 흔히 이야기하는 스마트 숍(smart shop)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도·소매점포 공동구매 체계도 구축을 하고 또 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3만 명 정도도 교육도 시켜서 일면에서는 SSM 등 대형유통업의 진출 속도를 조절을 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투 트랙 전략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장관님의 실력을 믿고 좋은 안 만드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해서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추진하고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柳一鎬 議員** 그런데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맡고 채권 관리는 국세청이 하게 되고 이게 이원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하는 쪽의 방만한 운용, 소위 모럴 해저드가 걱정이 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관리 잘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지금 계속 한국장학재단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실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柳一鎬 議員**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안 하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문제는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요. 법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 된다' 그런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이제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는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알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감사합니다.

○**柳一鎬 議員** 그동안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잘 수립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둠의 터널의 어둠이 끝나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앞으로 그 이후에 밝은 세상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유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이것을 공정거래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총리를 비롯해서 각 장관이 의장단에게 예표하시는데 공정거래위원장만……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것 한번 분석해 가지고 내일 중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기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광진 갑 출신 한나라당 권택기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갈등으로 세종시 문제가 지금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종시는 더 이상 정치적·정략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 되는 것은 여기 남기고 돈 안 되고 시끄럽고 싸우는 것은 충청도로 보내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어느 선거기간에 있었던 말로 알고 있습니다.

○**권택기 의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02년 12월 11일 인천지역 유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세종시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가진 세종시를 진정으로 충청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제대로 된 명품 첨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는 사실상 수도를 천도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편

법으로 만들어 낸 기형적 산물입니다.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자족기능을 갖춘 행복도시로서의 충분한 준비는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플러스 알파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거 정부처럼 여기 있는 것을 뺏아서 저기 주고 또 찢고 나누고 분산하는 것은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나 울산, 포항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2007년도 11월 29일 이명박 후보가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하여 “이명박 표 세종시 명품 첨단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권택기 의원** 그때부터 이명박 후보는 자족도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택기 의원** 그리고 대선 공약집에도 보시면 자족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여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가 왜 이 명품 첨단도시를 제안했는지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 것 같습니다. 도시를 만든다고는 했지만 자족적 기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이것을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권택기 의원** 총리께서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청도민을 포함한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윤성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충청 지역 인사와 반대하는 측의 인사들까지 폭넓게 위원회에 참여토록 부탁을 올렸습니다. 학계의 전문연구기관뿐 아니라 인터넷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의 여론까지 수렴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의 이 논란은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모적인 정쟁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길 뿐입니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총리께서는 언제까지 그 대안을 제시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지난 11월 4일에 1월까지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논란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충실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그리고 총리께서 처음으로 5일간 대정부질문을 보셨는데요, 그 경험 소감을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평소에도 국회의원들을 존경했지만 여기 와 보니 정말로 그 열정이 대단하시다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권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대외의존도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세계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주요 연구기관과 석학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불가피한 더블딥 현상이 우려된다는 시각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당분간 장기침체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신중한 낙관론을 보이셨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세계 경제와 조금 차별되게 낙관론으로 볼 수 있는 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저희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경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국내적으로는 나름대로 잘 대처해 왔고 또 이번 이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발생되어서 전이가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은 타격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기업과 금융 부분의 구조조정이 많이 나름대로 진척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세계 경제하고는 조금 격차를 두고 우리가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낙관을 갖고 있습니다.

○권택기 의원 그러면 고용은 좀 일어나지 않겠지만 성장은 잠재성장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서 내년도 저희 경제성장 전망을 4%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택기 의원 그리고 이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출구전략입니다.

장관님께서 출구전략이 아직 이르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출구전략은 언제 실시할 것인가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우에는 1930년대의 대공황 당시에 루스벨트 정부가 선부른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또 1990년대 초의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기 재정정상화로 인해 가지고 장기불황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상당히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재정건전성과 재정확대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미국발 경제위기를 치유하기 위한 대수술을 받고 이제 영양주사를 맞으면서 회복 중인 환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계속 투입을 해야지 지금 끊어버렸을 때 과연 내년 성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재정 확대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직은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택기 의원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9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12일 날 또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금리인상이 상당히 관심인데요. 주요 선진국은 가계부채 조정을 거쳤지만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예측하기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쓰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맞추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는 분명한 생각이 아직은 premature, 시

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변경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돼야 합니다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잘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택기 의원 장관님,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것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을 대폭 축소하셨어요.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이 2조 70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추경에 반영되었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이 3000억 원으로 줄었고 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2조 7000억도 완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줄인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부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한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중소기업이나 또 일부 계층에 대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 이러한 부분은 빨리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계속 개선되고 요청되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가 조치했던 신용보증문제, 지금 말씀하신 정책자금 지원문제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 대신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대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새겨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장관님 표를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회사채시장에서 우량채권과 비우량채권의 금리 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중소기업이 회사채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자금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결국은 은행에 가서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신용위험이 완화된 이후에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다음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자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조 6547억 규모의 다양한 정책자금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는 1조 9456억이 집행됐고요, 반대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6.7%입니다. 약한 7091억인데요.

사실은 대부업체에 가고 있는 이 저소득층은 대체로 생활안정자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활기금도 중요합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더구나 보시면 이 생활 지원도 근로자들한테는 그나마 조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을 하거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사업 실패를 하고 나면 정말로 돈을 빌릴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로 가다 보니까 2008년 9월에 비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인구 수도 12만 명이 늘었고 이용 금액도 39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저를 봐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가칭 뉴스타트 생활안정자금제도를 제안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저축은행하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연리 한 15% 정도의 대출을 취급하고 정부가 공적보증을 통해서 대출채권을 매입해서 유동화시키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리론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연간 한 1500억이면 서민 30만 명에게 5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실직이 되거나 수입이 급감한 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가지고 지금보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정말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뉴스타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실은 1500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관계기관과 한번 협의

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담보와 신용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영세서민이나 근로자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도 최근에 미소금융재단도 발족시키면서 이러한 금융기관에 액세스(access)가 어려운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발족해서 큰 도움을 줄 계획을 지금 펼치고 있는 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대출 지원을 하는 데 재정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우리가 신용회복기금에서 대부업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대출 전환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구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막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자,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에 보면 2016년이면 연간 9억 7500만t의 용수가 부족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용수가 부족한 이유가 강우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지금 강우량은 비교적 있는데 집중해서 강우량이 오고 또 이것을 제대로 담아 놔야 되는데 그릇이 부족하고 그런 게 주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택기 의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4대강을 정비하시겠다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권택기 의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제는 물이 에너지입니다. 2008년 8월 스톡홀름 세계 물 회의에서 보면 물 부족으로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석에너지가 고갈되는 시대에 대비해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지속 성장의 관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존 앤서니 앨런 교수는 바이오 연료 사

용으로 인해 수자원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 연료용 대체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나 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려면 바이오 연료 1ℓ 당 생산하는 데 평균 1000ℓ에서 4000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 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물 수요량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한 계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거기까지는 미처 예측을 못 했고, 특히 또 우리가 하천 유지 용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물 부족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2016년에 10억t보다도 더 많은 수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일부에서는 4대강에 보가 설치되어서 수질이 악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낙동강에서 자랐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낙동강에 소금배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말라서 물고기조차도 볼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한강에는 잠실보와 신곡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풍부한 유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한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관님 이게 한강을 파괴한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의원님 지적대로 이런 보를 만든다든가 또 오염원을 차단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소위 퇴적토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한강은 물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수질도 3급수에서 2급수로 올라갔고 물고기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즐기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미 강을 살리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는 것이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택기 의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강의 잠실보 바로 위에 구의취수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보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썩은 물을 먹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강 살리기 사업하면서 오염원을 차단했기 때문에 물이 더 좋아졌습니다.

○**권택기 의원** 그런데 야당의 의원들께서는 보 때문에 강물이 썩는다고 그러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을 못하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또 그리고 공사 이후에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저희가 지금 공사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흙시물이 오락될 가능성이 있어서 진공흡입식 방법을 쓴다든가 또 오락 방지망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최대한 오락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센터까지 이미 낙동강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감시하면서 공사 중에 식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최근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LTV, DTI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단편적인 처방이라고 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는 결국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공 부문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민간 부문에서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사실은 민간주택 공급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도입할 때는 이것

때문에 분양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는 오히려 분양가 억제 효과보다는 민간주택 공급을 말하자면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저는 비싸고 큰 아파트들은 시장에 맡기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아파트들은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택시장을 활성화하되 대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프트사업처럼 공공주택을 대량 확보해서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께서 신혼부부들에게도 어느 시점까지는 집을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 집값 걱정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금자리주택은 보면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들에게만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또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는 이 자격을 좀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걸 좀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우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공주택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정부의 특징적인 주택정책은 과거에 가격이나 거래나 이쪽에 규제를 했던 것은 과감하게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이걸 제거하면서 그 대신 그동안 주공이나 이런 공공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민간의 따라간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확실히 공공 부문은 정말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전적으로 주력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대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주택이 공급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제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이겨낸 경제대국이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룬 저력 있는 국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에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비롯하여 여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민을 섬기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질적 성장의 경제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권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시 관악을구 출신 김희철입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우리 관악구에서 오신 주민 및 당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은 국정 전반에서 총체적인 후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만 달러 공약을 했으나 소득은 감소하여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야 2만 달러 소득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온통 나라 빛, 가계 빛, '빛잔치 경제'입니다. 일자리도 줄고 소득도 주는데 사교육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되어서 광장도 막히고 인터넷도 막히고 정부를 비판하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주변 강국과 북한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만 하면 한국 경제가 과거 개발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747 허구성 공약을 내세워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장률을 5%로 설정함으로써 747공약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정운찬 총리,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747이 허구였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7%, 747공약은 7% 성장이 가능하도록 성장잠재력을 높이자는 것으로서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비전이자 목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정부 수립 이후에 60년 동안 국가 빛은 299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출범 후 2년 만에 109조 원의 빛이 늘어났습니다.

총리, 현재 나라 빛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36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예, 지금 정부 통계는 366조입니다. 다마는 국회 추산으로는 700조, 그리고 모 당 한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1400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가계 빛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주 많습니다. 가계가지고 있는 빛 전체가 제 기억이 맞다면 660조, 67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예, 670조 정도에 이르고 있고,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가처분소득의 1.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747 허구성 공약을 내세워 우리더니 대한민국 경제를 온통 빛잔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거덜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세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김희철 의원** 흔히 진보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리고 보수정부가 적자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 때 재정적자가 늘고 클린턴 행정부 때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리다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등으로 해서, 그리고 또 국채를 발행해서 빛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국의 경우 보수정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레이건 정부나 부시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더 크고 또 국채가 늘어났던 것은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린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세를 해서 세수를 줄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정권 모두 다 군사비 지출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이명박 정부는 부시 행정부처럼 부자 감세, 과도한 재정 지출로 재정을 파탄시킨 정부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의 위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재정적자가 늘었고, 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국가채무도 늘었습니다. 우리 국가채무는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걱정하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 큰 나라들에 비해서 그 절대적 규모는 아직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의원** 재정건전성 문제는 이제 총리께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무래도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재정 지출은 제한하고 세수는 세원을 넓히든지 해서 더 늘리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는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것이냐, 역시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다음에는 용산참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때 총리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10월 3일에 용산에 방문했는데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갔다 온 다음에 저는 총리실에 전담자를 지정해서 유족들과 대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기도 하고 또 몇 번 통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당사자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김희철 의원** 구체적인 결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희망을 가졌다 버렸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철 의원** 지금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300여 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 단 한 건도 실속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는 지난 10월 3일에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 문제는 그 재개발조합이 주관 하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유족과 조합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희철 의원** 용산참사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농성 하루만에 경찰특공대가 침투를 해서 대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특공대는 이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그 이유야 어쨌든간에 지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못이나 또는 누가 잘한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고 싶습니다.

○**김희철 의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경찰특공대가 새벽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러한 대참사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당사자 간의 문제다, 조합과 세입자 간의 문제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앙정부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용산참사 조합과 세입자 간의 문제이므로 서울시의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이 사안의 성격상 서울시를 비롯한 당사자 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대해

서 보다 적극적인 협상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서울시는 말입니다. 서울시장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구역 지정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진압 당시에 경찰의 특공대장은 남일당 망루 안에 시너 등 발화물질이 다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새벽에 침투를 시켰습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물론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런 내용은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경찰특공대장이 남일당 망루에 시너 등 발화물질이 다량으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대원들에게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꼭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다마는 용산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10월 28일 법원의 판결에서 일차적으로는 그 원인이 규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의원** 총리로서 지금까지 이러한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국가가 모든 책임성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판단을 할 때는 남일당 망루에 시너 등 60여 통이 있었습니다. 발화물질이 있다는 것을 특공대장이 자기 대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알리게 되면 대원들이 침투를 안 하니까 거기에서 알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큰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초동단계에서 진화하기 위해서는 화학차를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펌프차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리고 지금 수사기록 3000쪽도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6년이라는 중형의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이 수사기록은 언제쯤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록과 같은 증거자료의 제출 여부는 검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상인들에게 문정동 임시 영업장소를 마련을 해서 청계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노력한다면 지금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임시 영업장소나 선 임차권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 때는 서울시에 지하상가가 한 30여 개 됩니다. 그리고 점포가 한 3500개 되는데 여기서 100개만 좀 활용을 해서 순환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서 용산 문제 해결하고 또 다른 지역도 활용하고 순환으로 돌아가서 하게 된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또 서울시장과 여러 가지 조정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총리 그리고 서울시장, 유족대표, 종교단체 그 4자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돌아가서 총리실 사람들하고 검토해 보고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장에게도 역시 전달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용산참사는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계획 결정이 지금 현재 28개가 뉴타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민이 72만 명, 그러니까 개발 전에 72만 명, 개발 후에 58만 명 해 가지고 14만 명이 쫓겨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세입자를 쫓아내고 또 이들은 다른 재개발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재개발지역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번져가고 있는데 그

래서 이번 용산참사와 같은 엄청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보호 정책 등 몇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20일 서울서부지법은 도정법 제49조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희철 의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것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이라든가 현금정산 이런 문제가 어디에도 이제 앞으로는, 물론 현재의 결정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4월에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관께서 철저히 해 가지고 잘 뒤져서 여기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희철 의원 그다음에 방금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임시 영업장소 마련과 선 임차권 보장을 제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제2의 용산참사나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임시 상가 제공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는 제도입니다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대체 상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어떻게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김희철 의원 전 서울시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라 이 말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만 권리금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행으로 된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희철 의원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희철 의원 상가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에서 규정한 5년 동안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사하지 않으면 이 행사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상가권리금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맞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권리금 문제 때문에 특히 용산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시다마는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마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전으로 법적인 그런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계약갱신요구권을 권리금과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를 20%까지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됐는데 이것도 삭제해 버렸고, 또 초과용적률의 25%를 갖다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서민들이 살아야 되는 소형주택·임대주택을 전부 없애 버립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없애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범위를 넓혀서, 전에는 이렇게 딱딱 카테고리를 지어서 했는데 넓혀서 이걸 지자체의 실적에 따라서……

○김희철 의원 그것은 임대주택이 아니잖아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리고 순환정비사업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순환정비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우선 지금은 공공임대주택 한 50%를 순환주택용으로 쓰도록 하고요, 의무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가능한 한 순환주택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것도 의무조항과 임의조항으로 나눠 가지고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반시설은 전부 주민들만 다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국가와 지자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견해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돈을 댈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해서 금년에도 한 500억 이상 반영됐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넣어서 가능하면 국가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버냉키 미국 FRB 의장이 아시아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수출주도형 경제는 위험하다면서 내수 확대와 의료 및 교육 투자 확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윤 장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난 19일, 말씀하신 것처럼 버냉키 FRB 의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어떤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국가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내수 부양이 필요하며, 한국의 원화는 2008년 초에서 2009년 3월까지 달러 대비 40% 평가절하되었으나 아직 그 가치가 부분적으로만 회복된 상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미국의 압력, 내년에 예상되는 미국경제의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 그리고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글로벌 기업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경제도 내수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윤 장관, 내수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의원님 의견에……

○**김희철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대외의존도가 너무 심한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더 계속 늘려가야 하지만 그에 맞추어서 내수를 더 늘려서 내외 균형을 가져가는, 그렇게 해서 확대 균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수시장을 키울지에 지금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선진화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김희철 의원** 내수 증대를 위해서는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그 소비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것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까지 총 감세액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세액이 얼마냐는 겁

니다, 2012년까지 5년 동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한 33조 정도로 봅니다.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누계 개념으로 만 90조, 89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순액 개념으로 하면 한 33조 정도……

○**김희철 의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73%가 전부 소득상위 10%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소득상위 10%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것은 통계청에 의하면 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 감세는 소비진작과 경기부양 효과는 전혀 없고 부자만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게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까 유일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인하여 주더라도 절대액은 많습니다마는 그 감면율을 본다든지 상대적 비교를 해 보면 결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유리하게만 조세감면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예를 들면 감면된 세액을 바로 투자를 하지 않지 않느냐, 소비를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의원** 크루그먼 교수는 ‘대폭로’라는 책에서 부시 정부가 자본소득, 즉 불로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없애고 오직 노동소득에만 과세되는 체제로 옮겨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의 부시 행정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글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의 논리에 대해서 제가 정면으로 멘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현상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크루그먼 교수의 지적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쪽으로 너무 지나친 의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희철 의원** 지난해 세계 부동산 거품 붕괴에

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안전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동산 대출규제를 안 했더라면 집값이 60%까지 내려갔고 지난해 은행이 부실화되고 경제 전반이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 들어서도 지난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DTI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지금 정부도 어떤 정부 못지않게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계 경제석학들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과탄에서 경제위기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더블딥(double dip)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700조 원의 나라 빚과 700조 원의 가계 빚의 빚잔치 경제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6조 원의 부자 감세와 22조 원의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국민 혈세로만 22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국민 혈세 퍼붓는 일입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빚더미 속에 내던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무늬만 친서민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국정기조 전환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용산참사 해결과 부자 감세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철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는 이전에 비해서 개의와 속개 시간이 비교적 잘 지켜진 편입니다. 이것은 성의 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그래도 정치공세보다는 정책질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성의 있고 차분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4대강 사업 문제, 신종플루 관련 대책, 쌀값 하락 대책과 같은 국민 관심사가 때로는 진지하고 심도 있게, 때로는 열기 넘치게

논의된 점은 평가하고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 제도의 고질적 문제점은 이번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품격을 벗어난 질문 태도와 내실 없는 답변 자세 그리고 꼭 찬 방청석에 대비되는 텅빈 의원석은 대정부질문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대정부질문 개선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하루속히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대정부질문 제도는 올해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안심사에 들어갑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충실한 심사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 ○출석 의원(248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최규성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최영희
김태원	김태환	김형오	한선교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현기환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홍재형
류근찬	문희상	박기춘	홍정욱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강기정
박상돈	박상은	박선숙	강성천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권성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김동철
박희태	배영식	백원우	김성식
백재현	변웅진	서갑원	김유정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김정권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김태원
송훈석	신건	신성범	김희철
신영수	신지호	신대평	박대해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박상은
안상수	안홍준	안승조	박주선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변재일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성윤환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오제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원희목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유재중
이경재	이계진	이낙연	이강래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성현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용경
이성현	이시종	이애주	이은재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종혁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한구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회창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정미경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정태근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조순형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진영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최병국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홍사덕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황영철
정범구	정병국	정수성	최병국
정영희	정욱임	정의화	최영희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홍영표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황진하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강명순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구상찬
조해진	주승용	진성호	김기현
영	차명진	최경환	김용태
		최	김춘진
		최	서병수
		최	신성범

○개의 시 재석 의원(122인)

강기정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성천	강창일	고홍길	고홍길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권성동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김세연
김성식	김소남	김영록	김정권
김유정	김재경	김재균	박보환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박선영
김태원	김태환	김형오	배은희
김희철	노철래	류근찬	서상기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신영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우윤근
박주선	박지원	변웅전	유성엽
변재일	서병수	서종표	유정복
성윤환	손범규	양승조	이낙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이시종
원희목	유성엽	유원일	이용희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이재선
이강래	이낙연	이범래	이진복
이성현	이시종	이애주	이한성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장윤석
이은재	이재선	이정현	정수성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정하균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조전혁
이회창	장윤석	장제원	최경환
정미경	정수성	정장선	최영희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홍영표
조순형	조전혁	주승용	황진하
진영	최경환	최규성	한선교
최병국	최영희	한선교	홍일표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황영철	황진하		

○속개 시 재석 의원(62인)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김기현	김선동	김세연	김소남
김용태	김재경	김정	김정권
김춘진	김태원	김형오	박보환
서병수	서종표	송광호	송영길
신성범	신지호	안상수	안홍준

양 승 조	원 혜 영	원 희 목	유 성 업
유 원 일	유 일 호	윤 상 일	윤 영
이 강 래	이 균 현	이 두 아	이 용 경
이 윤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임 동 규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승 수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허 천	허 태 열	현 경 병
현 기 환	홍 정 욱		

○산회 시 재석 의원(70인)

강 길 부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영 진	김 낙 성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희 철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은 수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학 용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목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이 강 래
이 계 진	이 두 아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정 선
이 진 복	전 병 현	전 혜 숙	정 하 균
정 해 결	조 경 태	조 원 진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연 희	허 천
허 태 열	홍 영 표		

○청가 의원(18인)

김 광 립	김 무 성	김 장 수	김 충 환
김 학 송	남 경 필	문 학 진	송 영 선
신 낙 균	안 효 대	이 범 관	이 석 현
이 용 삼	이 종 결	임 영 호	정 진 석
추 미 애	홍 희 덕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계 동
입 법 차 장	안 병 욱
의 사 국 장	이 중 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윤 증 현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안 병 만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장 관	장 태 평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최 경 환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정 중 환

○출석 정부위원

농림수산식품부제2차관	하 영 제
공정거래위원장	정 호 열
금융위원장	진 동 수

【보고사항】

○의안 제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이춘석·박준선·주승용·박영선·신건·박은수·양승조·우윤근·유성엽·최철국·정동영 의원 발의)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김우남·박영선·조경태·유성엽·양승조·강기갑·이성현·이명수·조승수·김재윤·강창일·서갑원·김영록·정해결·김성수·최규성·김동철·이범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김우남·박기춘·김영진·조경태·신학용·이춘석·유성엽·변재일·김재윤·양승조·박선숙·신상진·이시종·한선교 의원 발의)

11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홍일표·이주영·김정권·유성엽·장윤석·이성현·한선교·이해봉·이두아·신학용·김성태 의원 발의)

11월 1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홍일표·노철래·이한성·박순자·이명수·이계진·한선교·장윤석·이성현·이두아·정동영·김성태·손범규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박민식·김금래·김성태·김정훈·이진복·이한성·장윤석·전현희·조윤선·황영철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장윤석·김성태·배영식·송영선·오제세·유기준·유성엽·유승민·이명수·이성현·이한성·이해봉·조윤선·허태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박민식·김금래·김성태·신성범·안효대·이진복·이한성·전현희·조윤선·황영철 의원 발의)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서갑원·김부겸·이종걸·김영진·박주선·양승조·변재일·전병헌·김상희·전현희·백재현·김우남·서종표·신학용·유성엽 의원 발의)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김을동·홍사덕·송영선·정의화·김우남·김태원·이명수·전병헌·안규백·박선영·유기준·이철우·이시중·유성엽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김장수·고승덕·김옥이·안효대·심대평·강석호·이용삼·유기준·이인제·현기환·최인기·박상돈·김춘진·이한성·김무성·이병석·이진삼·임동규·최연희·유승민·이명수·홍준표·안규백·이성현·이해봉·이시중·정수성·서종표·김소남·문학진·김영우·이계진·김학송·김효석·송영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정두언·남경필·이한성·이명수·강석호·배영식·진성호·이해봉·정태근·정갑윤·조전혁·김용태 의원 발의)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주승용·최철국·전현희·이춘석·우윤근·박은수·노영민·김재균·김동철·박상돈·양승조·김성곤·이용섭 의원 발의)

11월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송영길·송민순·전혜숙·백원우·박은수·이윤석·양승조·백재현·최영희·박영선 의원 발의)

11월 11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운태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강운태·유성엽·김성수·조영택·김재균·안규백·김효석·김영록·강창일·송민순 의원 발의)

11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위문금 각출의 건**

(2009. 11. 11 의장 제의)

**휴회의 건**

(2009. 11. 11 의장 제의)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19일간)